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③
1989년 동유럽
항쟁과 독일의 통일

▶ 8~9면

오바마의 아프파к 전쟁
왜 오바마는 부시의
전쟁을 계승하는가

▶ 3면

10월 재보선 이후
왜 민주대연합이 아
니라 진보대연합인가

▶ 4면

경제 위기와 노동자
서울대병원 여성비정규직 인터뷰,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 7면

신종플루
신종플루 불길에
부채질해 온 정부

▶ 6면

MB 교육 정책
홍세화 인터뷰,
외고 폐지 논란

▶ 12면

발행인_ 김민식 편집인_ 김재현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2주)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남창동 206-146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777-021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56

Left21.com

2009년 11월 7일 ~ 11월 20일 | 제18호 | 값 1,800원

레프트21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미군 폭격으로 부상당한 아프가니스탄 어린이(좌),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로 숨진 윤창호 하사(우)

지난 10월 30일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을 발표했다. 기존의 지역재건팀(PRT)을 1백30명으로 5배 확대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전사 중심의 병력 3백여 명을 추가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은 “[재파병의] 목적 자체가 전투는 절대 아니고 민사재건 활동을 도와주”는 데 있다며 파병을 둘러싼 논란을 비껴가려 했다.

그러나 “전투병과 비전투병을 구별할 수 없”고 “불가피한 교전과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국방부 장관 김태영의 실토가 진실이다.

정부가 “재건”의 명분으로 삼는 지역재건팀(PRT) 자체가 “부시 행정부에 의해 기획된 군 주도의 재건 활동을 의미하

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점령군의 군사행동”(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4년 당시 미 국무장관 폴린 파월은 PRT를 “우리 전투병력의 중요한 일부”라고 불렀다.

아프가니스탄 경찰을 훈련시키는 것도 PRT의 주요 활동 중 하나다. 이런 상황에서 PRT가 저항 세력의 표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비극의 전주곡

정부는 “자체 방어와 자위권 행사 외 전투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하지만, 9월 초 아프가니스탄 쿤두즈 공습으로 최소 1백20여 명을 목살한 독일군의 명분이 ‘자체 방어’였음을 기억하자.

한편,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유엔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인 전쟁”이라며 재파병을 정당화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라크 전쟁과 달리 ‘명분 있는’ 전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의 지지 여부가 전쟁의 정당성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유엔 자체가 안보리상임이사국, 즉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비민주적 기구다. 그래서 유엔은 늘 강대국들이 일으킨 각종 전쟁들을 정당화하는 들러리 구실을 하거나 그 자신이 점령군 행세를 하며 약소국 국민들을 억압했다. 1993년 미군과 함께 소말리아인 수천 명을 학살한 유엔 ‘평화유지군(PKO)’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유엔은 아프가니스탄 대선에서

미국의 꼭두각시 대통령 카르자이의 선거 부정을 적당히 덮어 줬다.

유명환은 또 “글로벌 코리아로 가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라며 재파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을 과시하며 추악한 점령과 학살에 동참해서 제국주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현재 세계 12개국 13개 지역에 7백8명을 파병한 국가이고 한국 지배자들은 계속해서 그 규모와 횡수를 늘리려 한다. 그러나 정작 지난해 개도국에 지원한 공적 개발원조는 7억 4천7백만 달러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이에 더해 ‘한미동맹’도 한국 정부가 파병을 결정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지배자들의 이런 ‘소(小) 제국주의적 야욕’과 ‘한미 전쟁동맹 중시 정책’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 왔다. 한국이 점령군의 일부로 인식되면서 평범한 한국인들이 테러의 표적이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또 다른 비극의 전주곡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재파병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가 주최하는 11월 14일 서울 도심 반전집회, 11월 18일~19일 오바마 방한에 맞춘 재파병·전쟁 반대 촛불집회에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이 함께하자! ▶ **관련기사 3면**

조명훈 기자 | jomh@left21.com

부자 감세와 4대강 관련 예산을 노동자 서민 복지로 돌려야 한다

이명박은 2009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친서민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0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재원 배분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백2억 원을 삭감한 정부가 어찌 “서민을 따뜻하게” 해 주는 정부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게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가 할 일인가.

서울 전역에서 막무가내 식 동시 재개발로 집을 잃고 전·월세 폭등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에게 평당 1천만 원이 넘는 보급자리주택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도심 재개발로 이익을 얻는 것은 부동산 재벌들과 땅부자들이다. 사람을 죽이며 강행한 용산 재개발로 삼성과 포스코는 4조 원 이상을 벌 것으로 추정한다.

“서민은 열반게, 부자는 두텁게”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고달파지는데 MB 사돈 효성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군납업체 로우테크만 해도 가격 조작으로 2백2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효성 일가는 미국 호화별장 두 채 구입비로 1천만 달러를 썼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서민을 열반게, 부자를 두텁게”하는 친재벌·친부자 정책에 어설픈 포장만 씌운 게 이명박 ‘친서민’ 정책의

실체다.

이명박은 경기 부양과 민생 지원을 위해 적자 기조를 유지했다고 하지만 적자 기조는 순전히 부자 감세에서 비롯한 세수 부족과 과다한 4대강 죽이기 예산 때문이다. 내년에만 부자 감세로 세수가 24조 원 줄고 4대강 관련 예산이 총 10조 원 가까이 들어간다.

25만 명 결식아동의 방학중 급식지원 비조차 삭감해 놓고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내년 총 예산에서 추정 대비 복지재정 증가율 0.6퍼센트는 지난 5년간 평균(21.6퍼센트)에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친다(민주노동당).

기금 등 제도적 자원증가분과 보급자리 분양 사업 예산을 감안하면 **실질 복지 지출은 오히려 9조 원가량 삭감됐다**.

이명박은 일자리 예산을 강조하며 내년에도 희망근로 10만 명을 유지하겠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올해와 비교하면 15만 명이 줄어든 수치라는 사실은 감춰졌다.

교육 예산도 올해보다 1조 4천억 원이나 줄어든다. 개별 학교로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5퍼센트 줄었다.

4대강 직접 예산 6조 7천억 원이면 2백억 원짜리 학교 3백30곳을 신설할 수 있다. 그래야 OECD 평균인 한 학급당 학생수 16.2명에 근접한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다(진보신당).

5천억 원이면 신종플루 백신을 온 국

민에게 무료 접종할 수 있는데도 정부는 그렇게 하질 않는다. 가난할수록 감염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4대강 죽이기와 부자 감세만 중단하면 전 국민 신종플루 무료 백신 접종, 무상급식, 동절기 난방 지원 등은 얼마든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명박은 서울시장 시절엔 세종시 건설에 결사 반대하다가 대선 후보 시절엔 “훌륭한 계획”이라며 ‘명품 도시’를 약속했다. 그래 놓고 이제는 ‘수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투기꾼들만 한몫 챙기고 지역의 서민들만 이리저리 휘둘렸다.

이처럼 손익에 맞춰 그때 그때 말을 바꾸는 정부를 누가 믿겠는가.

김문성 기자 | enlucha@left21.com

세상을 이끄는

“친서민 하지만 서민 좋은 일 아니다”
“세종시 안 하지만 안 하는 건 아니다”
“효성 수사 대충하지만 사돈 봐 주기 아니다”
“당선은 했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현재스런’ 판결을 비꼬는 네티즌들

“무수한 절차 위반, 원칙의 위반을 꼼꼼히 지적하면서도 무효청구를 기각한 현재의 판결은 법정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준 뜻밖의 선물 같은 사건”

서울대 교수 윤석민

“만약 이번 폭력 행위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모든 단체들이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설 것”

용산 판결에 대한 검찰의 고민

“[민중의례에] 정부와 국가를 전복의 대상으로 보는 혁명세력의 계급의식이 깔려 있다”

〈국민일보〉

“전교조가 강조하는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상’은 창의성이 결여된 공산주의적 인간상”

3천5백만 원 들인 교과부의 ‘전교조 죽이기’ 보고서

“‘외고’는 현재 한국에서 ‘입시 명문’ 또는 ‘사회적 성공의 발판’, ‘국·영·수 문제 풀이 잘하는 애들 집합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한 외고생의 고백

“가격표에 1백만 원쯤은 호기롭게 매길 수 있는 명품 막걸리도 몇 개쯤은 보고 싶다”

막걸리도 명품만 찾는 〈조선일보〉 박정훈

“가갸호호 아이들쉴, 하하호호 대한민국”

“한 명은 외로우니, 먼 인생길을 의지하고 함께 살아갈 형제를 물려주자”

보건복지가족부의 출산장려 구호

구속 노동자 수 3백34명

이명박의 “법질서 확립”은 ‘재벌무죄 노동자유죄’ 사회 만들기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언론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본 많은 네티즌들이 ‘현재스러운’ 패러디를 쏟아내면서 새로운 유행어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무래도 연말 개그 대상은 헌법재판소가 받아야 할 것 같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사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법이란 결국 손에 피를 묻힌 자본주의 승자들을 보호해 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과정은 불법이나 결과는 합법”이라는 궤변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해 줄 때만 동원되는 법 논리다. 용산 철거민들을 불 태워 죽이고,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을 고사시키려 한 이명박 정권의 범죄는 이런 논리에 따라 정당화됐다.

그러나 노동자와 서민 들은 사건의 동기나 과정이 아무리 정당해도 사소한 것 하나라도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그 행위 전체가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을 면치 못한다.

구속노동자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들어 노동자가 3백34명이



‘살인 진압’을 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이 이제 ‘사법 살인’까지 당하고 있다.

구속됐다(10월 31일 현재). 구속 사유는 대부분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집시법 위반”이며 국정원과 보안경찰이 기획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도 있다.

노동3권이 헌법상에 명시돼 있는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정의행위 대부분은 불법이 되고, “업무방해”로 구속,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경찰과 검찰은 자신들이 먼저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어도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파업 노동자나 시위대에게는 무조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다. 조직폭력배를 처벌하려고 만든 “폭력행위 등에 관한 처벌법”도 저들이

단골로 이용하는 메뉴다.

이러면 3년 이상 중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은 자동이다. 가정이 몇 개월만 감옥에 있어도 그 가정은 파탄에 이를 수 있다.

지금 평택에서는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며 정리해고에 맞서 77일 동안 옥쇄파업을 벌였던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사법살인’이 자행되고 있다. 단일 노조 파업 사상 가장 많은 86명이 구속됐다. 소환된 파업 노동자에게 검찰과 경찰이 “선처”와 “복직”을 미끼로 동료의 이름을 대라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양심의 상처를 입은 노동자는 자살을

용산 참사

정부도, 서울시도, 사법부도 철거민들의 애원에 모르쇠로 일관하다



10월 30일 경찰이 단식농성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을 연행해가기 위해 에워싸고 있다.

10월 28일 구속된 철거민들의 선고공판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읽다시피 하며 무고한 철거민들에게 징역 6년 등 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 3천 쪽을 감추며 진실을 은폐하고,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 화재가 났다는 것을 입증하지도 못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특공대원, 소방관, 정보과 형

사, 용역 직원들에 의해 검찰의 논리가 반박 당했는데도 말이다.

무고한 철거민들을 살인 진압하도록 교사한 이명박 정부, 철거민들을 무참히 죽인 경찰, 이들의 범죄와 증거를 은폐해 준 검찰, 이 모든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준 사법부, 이들 모두 한통속이다.

평범한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나선 ‘용산 국민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명박, 김석기, 오세훈, 천성관이야말로 유죄다. 시민 배심원들의 정의로운 판결이 바로 민의(民意)다. 당장 죄 없는 철거민들을 석방하고, 살인자 김석기를 구속해야 한다.

말로만 ‘친서민’ 떠드는 이명박 정부의 본질은 ‘깎가지 권능을 특정 자본권력과 극소수를 위해서 그릇되게 남용하고, 이익을 제기하는 국민에게는 가혹한 철퇴를 휘두르(는) ... 강도집단’(11월 2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선언문)과 다름없다.

김인숙 다함께 연대협력국

연행·수배·구속자
지원 등을 위한

2009 다함께 후원의 밤

일시: 2009년 11월 26일(목)
오후 6시~10시

장소: 용산 철도웨딩홀

주최: 다함께

문의: 02-2271-2395
www.alltogether.or.kr



정신 나간 체제의 단면

세계적 곡물 풍년 속에 10억 명이 아사 위기

올해 미국의 곡물 수확 전망치가 애초 예상을 웃돌고 있고 중국과 브라질의 곡물 수확도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도 쌀농사가 지난해에 이어 대풍년을 맞았다.

그러나 이런 식량의 ‘풍요’ 속에서도 ‘빈곤’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펴낸 ‘2009 식량불안상황 보고서’를 보면 거의 10억 2천만 명이 아사 위기에 놓여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2년 새 2억 명이 늘어난 수치로 30개의 나라에 긴급 식량 원조가 필요하다.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5초에 한 명꼴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 사무국장 조

렛 시러는 2년 새 개발도상국 내 유통 상품의 80퍼센트가 가격이 갑절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예전에 살 수 있었던 식량의 절반도 제대로 사지 못해 굶주리고 있다.

휴전선 바로 건너편의 북한도 식량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이르는 8백만 명이 굶주리고 있고 식량지원이 없으면 대량 아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풍요 속의 빈곤’은 전적으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자본주의적 분배에 기인한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비만으로 만들 만큼 아주 많은 식량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FAO는 1984년에 당시 농업생산

력을 기준으로 지구는 인구 1백20억 명을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장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족하게 식량을 생산하지만, 이윤 논리 때문에 수억 명이 굶어 죽어야 하는 체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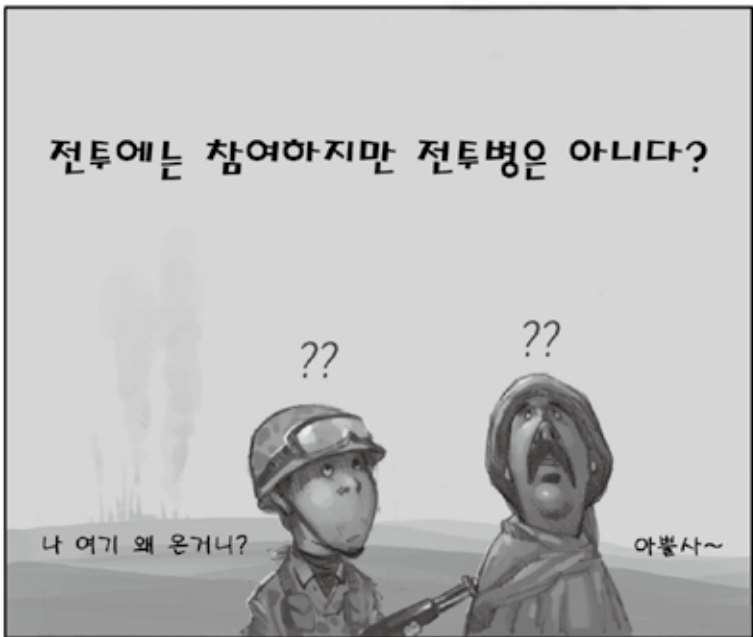
사상 최대의 곡물 공급량과 사상 최악의 아사 위기는 국제 자본가들이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시장이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전혀 쓸모없다는 것을 비극적으로 보여 준다. 그리고 이윤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민주적으로 분배하는 시스템이 왜 절실한지 보여 주기도 한다.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폴라주 14

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MB의 해외판 현재 높이



일루전

‘부시의 전쟁’을 지속하는 오바마

오바마는 ‘부시의 전쟁’을 반대하고 더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평범한 미국 노동자와 서민 들의 염원에 힘입어 당선한 사람이다. 그러나 집권 2백 일이 가까워진 2009년 11월 현재 오바마는 ‘부시의 전쟁’을 조금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에 여전히 12만 명이 주둔해 있고 이른바 ‘완전 철군’ 기한인 2011년 이후에도 5만 명 이상이 ‘이라크군 훈련’의 명목으로 남아 있을 것이며, 2007년 부시가 에티오피아를 부추겨 시작된 소말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맞선 전쟁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 변화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핵심 내용은 ‘부시의 전쟁’의 부정이 아니라 확대·발전이다. 오바마는 이미 아프가니스탄에 증파했고 추가 증파를 고려중이며, 이웃인 파키스탄으로까지 전쟁을 확대했다.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전쟁(‘아프팍’ 전쟁이라 불리기도 한다)은 명실공히 ‘부시의 전쟁’에서 ‘오바마의 전쟁’으로 확대·계승된 셈이다.

더 놀라운 점은 오바마가 이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전임 정부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즉, “아프가니스탄이 알카에다의 성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파키스탄과 인근 지역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고” 안정과 민주주의, 그리고 ‘신장된’ 여성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증명하는 것은 너무 쉽다.

테러리스트를 막고 안정을 가져 온다? 최근 한 미군 장교는 ‘탈레반’ 2명을 죽이기 위해 평균 95명의 민간인이 희생된다고 토로했다. 미군이 지금껏 2만 5천 명의 ‘탈레반’을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대략 1백25만 명의 민간인이 죽은 셈이다(아프가니스탄 인구는 3천만 명에 불과하다). 오히려 오바마 정부 들어 ‘탈레반 사상자 대 민간인 사상자’ 비율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또, 오바마가 파키스탄으로 확전하면서 현재 2백만 명이 난민촌에서 적절치 않은 지원 없이 추운 겨울을 나야 한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상황이 안정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점령군의 테러 때문이다.

민주주의? 리처드 홀부르크와 존 케리 등 오바마 정부의 특사와 주변 인사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해 압력을 넣은 결과 1백만 표 이상의 부정표로 1등을 한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이 자동 재선되고 2위 후보 압둘라 압둘라는 눈물을 흘리며 사퇴했다. 이승만도 카르자이에게 한 수 배워야 할 판에 민주주의를 말할 수는 없다.

여성권? 미군을 포함해 점령군이 아프가니스탄 지역 동맹으로 삼고 있는 군벌들은 여성권을 마구 유린하고 있다. 애초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탈레반을 잡



2009년 1월 7일 생존 전직 대통령과의 오찬 행사에서 부시와 오바마 두 사람의 대외 정책에는 공통점이 더 많다

지 지지했던 것도 군벌들이 너무 잔인해서였다. 그들이 미군에 힘입어 돌아왔고, 지금 여성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상 생활을 편히 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됐다. 올 초에 대통령 카르자이는 이들과 짜고 남편이 부인을 성폭행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려 했다.

이런 사실은 주류 언론에 광범하게 보도된 것으로 오바마 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점령으로 공식 목표의 반대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오바마는 왜 이 전쟁에 매달리면서 거듭 증파하고 동맹들에게 군대를 보내 달라고 압박지르는가?

‘부시의 전쟁’에서 ‘오바마의 전쟁’으로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 ‘부시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오바마의 전쟁’도 진정한 목표가 테러 척결·민주주의 확산·여성권 신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자주의적’ 오바마와 ‘일방주의적’ 부시 간 차이를 강조하는 분석이 혼란 상황에서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차이점뿐 아니라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네오콘의 ‘테러와의 전쟁’의 실제 내용은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을 사용해 중동 패권을 확립하고 잠재적 경쟁자들 —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 — 을 견제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중

동 석유에 대한 통제는 그런 지렛대 중의 하나다. 네오콘의 생각은 미국 자본주의가 경쟁력을 잃으면서 패권 유지를 위해 갈수록 군사력에 의존하게 된 지난 30년간의 흐름의 논리적 결과였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그 전략의 일부였다. 그래서 미국 지배자들 중 상당수가 네오콘의 오만함을 싫어하면서도 그에 동조했던 것이다.

오바마도 마찬가지다. 그는 일찍이 2007년 초에 미국의 목표로 네오콘과 동일한 것 — “미국의 **우월한 힘**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 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그가 내세운 수단도 네오콘과 동일 — **군사력** — 했다. “미국은 [아프리카의] 지부티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칸다하르까지 공세를 유지해야 한다. ...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최신의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유지해야 하며 ... 미국 대통령이라면 군사력의 사용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일방적**으로라도 말이다. ... [군사력은] 우리가 공격당했을 때뿐 아니라, 우리의 이익이 위협 받고 있을 때도 사용돼야 한다.”

따라서 ‘반전 후보’ 오바마가 전쟁광의 압력으로 타락했다는 평가는 사실이 아니다. 다만, 부시와 달리 오바마가 아프팍에 좀더 집중하는 것은 이라크의 상황이 잠시 안정된 상황에서 이 전략의 성패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향방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오바마 정부

가 완전 철군을 포함해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적 패배를 시인하는 정책을 취했을 때 뒤따를 파장은 대단히 크다. 미국 제국이 전 세계 국방비의 50퍼센트를 사용하고도 소총으로 무장한 게릴라들을 이길 수 없다면, 앞으로 누가 미국 말을 들으려 하겠는가.

따라서 오바마를 지지했던 미국 자유주의 언론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얼마나 ‘영양가’ 없고 국고의 낭비인지 백날 웅변을 토해도 오바마는 당분간 이 전쟁

을 밀어붙일 것이다. 미국의 좌파 언론인 톰 앵겔하트의 표현처럼, “대마불사는 파산한 미국 대형 은행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한 미국의 전쟁에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미친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바마에게 읍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고 자국 정부가 ‘오바마의 전쟁’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김용욱 기자 | ohatonge@left21.com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이 낳은 비극

무려 1만 6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베트남 전쟁 이후 한국 정부의 해외 파병이 본격화한 것은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2001년부터다. 이때부터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2007년 다산·동의 부대가 철수할 때까지 7년간 지속됐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이라크에도 군대를 보냈다. 처음에는 의료·공병 부대라며 서희·제마 부대를 파병하더니 2004년에는 전투 능력을 갖춘 자이툰 부대까지 파병했다.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아르빌 지역에 주둔하며 5년 동안 미군의 점령을 도왔다.

이 시기는 한국인들을 겨냥한 저항 세력들의 ‘테러’가 우리들을 충격과 고통에 빠뜨린 기간이기도 했다. 2003년에

는 오무전기 노동자들이, 2004년에는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2007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보가 잇따른 해였다. 그해 2월 미 부통령 딕 체니를 노린 저항 세력의 공격에 윤창호 하사가 순직했고, 7월에는 아프가니스탄에 자원봉사를 나갔던 샘물교회 교인들이 탈레반에 납치돼 2명의 희생자를 내고 42일 만에 풀려났다.

2009년에는 예멘에서 한국인 관광객과 자원봉사자를 노린 테러가 잇따라 발생해 한국인에 대한 반감이 파병 지역뿐 아니라 중동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조명훈 기자 | jomh@left21.com

더 읽을 책



조너선 닐 외 지음 | 차승일 옮김
《오바마의 아프팍 전쟁》
책갈피 | 5천 원, 143쪽

이 책에서 조너선 닐은 아프가니스탄인의 처지에서 본 전쟁의 현실을, 미국인 사회주의자 데이비드 화이트하우스는 고통으로 점철된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와 미국의 관계를 살펴본다. 영국 사회주의자 제프 브라운과 파키스탄 활동가 아심 잔은 파키스탄이 “미국 제국주의의 취약한 고리”라고 지적한다. 네 명의 지은이는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이 알아야 할 오바마의 아프팍 전쟁의 진실을 들려준다.



크리스 하먼 지음 | 이수현 옮김
《크리스 하먼의 새로운 제국주의론》
책갈피 | 5천9백 원, 192쪽

이 책에서 크리스 하먼은 레닌과 부하린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을 옹호하면서 오늘날 제국주의 현실을 분석하고 있다. 네오콘의 ‘군사 우위’ 전략이 미국 지배자들 내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 과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2003년 쓰여졌지만 오늘날 오바마 정부의 외교 정책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필수적인 책이다.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반전 집회

일시_ 11월 14일 오후 4시
장소_ 서울도심(추후 공지)
주최_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왜 반MB연합이 아니라 진보대연합이 필요한가

10·28 재보선은 진보진영 내 반MB 연합 노선이 정치적 패착이었음을 보여줬다(10·28 재보선 결과 분석은 www.left21.com에 실린 '10·28 재보선 결과와 진보진영의 과제'를 보시오).

반MB연합론의 정치적 실체는 진보진영과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였다. 진보진영은 한나라당 당선을 막겠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반MB연합에 집착했다.

평소 반MB연합에 부정적이었던 진보신당도 안상 상록을에서 “단일화는 피할 수 없는 것”(노회찬 대표)이라고 봤다.

민주노동당의 노세극 씨(임종인 선본 공동선대본부장)는 선거 직전에 “진보신당, 창조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선거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이것을 실행에 옮겼다. 강기갑 대표는 선거 막바지에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위해 자당 소속 후보들이 사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재선거에서 민주당은 반MB연대에서 적극적인 의지도, 성실한 자세도, 민주노동당과 공생하려는 태도도 보이질 않았다.”(최규업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소장)

놀라운 발견이 아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반MB연합에서 동등한 지위가 아니라 특권적 지위(〈민중의 소리〉표현법에 따르면 “패권적 성향”)를 점하고 있었다.

선거의 경우만 해도, 민주당은 그동안 가장 있는 지역에서는 후보를 양보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올해 4월 경기도교육감 선거, 지난 4월 울산북구 선거는 민주당이 아예 가망이 없었기에 나오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진보진영과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민주당으로의 후보 단일화**를 뜻했다. 진보진영이 반MB연대를 강조할수록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 — 현실에서 이것은 민주당 후보를 뜻한다 — 를 지지해야 한다는 압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

임종인 후보가 민주당에 큰 표차로 패배한 까닭이다. 임종인 선본은 진보대연합으로 출발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반MB연합 노선으로 우회전했고, 민주당이 최종 거부하자 진보대연합으로 급격하게 유턴했다.

갈지자를 그리다 보니 “[민주당]김영환 후보와의 차별성을 대중들에게 부각시켰어야 했”지만 “차별화가 쉽지 않았”다(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결국 유권자들은 버터 맛 나는 마가린 보다는 버터를 선택했다. 임종인 후보의 패배를 단순히 진보대연합의 실패로 볼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진보진영이 반MB연합의 그림자를 쫓



임종인 후보의 선거 유세 장면 일관되게 진보대연합을 유지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는 동안 반MB 정서의 수혜자는 민주당이 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자주파 일각에서는 반MB연합의 미몽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선거 직후에 “MB 심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야권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문제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야권 전체의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이해할 수 없는 논평을 냈다.

반MB연합론은 자주파들만의 것이 아니다. 일부 NGO들도 반MB연합론에 추임새를 넣는다.

하승창 ‘희망과 대안’ 공동 운영위원장은 “막상 선거에 임박해서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후보 단일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과 대안’의 첫 활동도 안상 상록을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중재였다.

‘희망과 대안’이 진보적 NGO의 정치 세력화를 뜻한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주기도 하지만, 진보대연합의 헤모글로빈

이 아니라 2007년 대선 당시 ‘미래구상’처럼 민주당 강화를 위한 수월 세력이 될까 봐 불길하기도 하다.

전략적 문제

반MB연합론은 민주당 같은 자유주의 자본가 정당과 노동자 계급의 체계적 계급 협력을 뜻한다.

2000년대 이래 대중은 투쟁과 투표를 통해 민주당의 영향에서 벗어나려 애써왔다. “비판적 지지론의 안티테제”(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로서 진보정당이 등장했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반MB연합론자들은 대중이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는데도 그 당을 구하려 애쓴다. 이 때문에 반MB연합론자들은 민주당을 두렵게 만드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민주당의 명령에 자신의 활동을 제한한다. 지난 6월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에 반대해 민주노동당 등이 민주당의 비정규

직법을 지지한 것이 그 사례 중 하나다.

박경순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은 선거와는 달리 대중투쟁에서는 반MB연대연합이 대중 운동과 민주노동당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선거 영역에서만 반MB연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MB연합의 진정한 문제점은 **의회 밖 투쟁 영역**에서 드러난다.

일찍이 러시아의 혁명이 레온 트로츠키는 프랑스에서 인민전선(반MB연합의 역사적 명칭)이 선언되기 석 달 전인 1935년 5월 28일에 이렇게 썼다. “급진당[프랑스의 자유주의 자본가 정당]과의 의회 동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이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범죄였지만, 의회주의라는 제한된 영역에서는 적어도 실천적 가치가 있다. 의회 밖에서 급진당과 반파시즘 동맹을 맺는 것은 단지 범죄가 아니라 백치 행위다.”

실로, 민주당은 의회 밖 영역에서도 완벽한 행동의 자유를 누리면서 노동자 계급의 투쟁에는 지극히 엄격한 제한을 가한다. 쌍용차 노동자 투쟁 당시, 민주당은 야4당 연석회의에 포함돼 있었지만, 점거 파업을 지지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의회 내 동맹자인 민주당을 의식해 국유화를 통한 고용보장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것은 진보정당이 민주당 같은 자본가 정당들과 동맹을 맺을 경우 세계 체제를 강타한 경제 위기에 대한 좌파적 대안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보여주는 사례다. 사회 변혁에 대한 논의는 먼 훗날의 일로 미루게 된다. 자본가 정당들 “관용으로 대해” 자본가들이 극우라는 대안에 매력을 느끼지 않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반민주적 탄압 반대 같은 특정 쟁점을 둘러싼 한시적인 전술 제휴를 넘어 전략적 반MB연합을 맺는 것은 계급 투쟁의 목덜미를 잡힐 수 있다. 물론, 전술적 제휴를 맺을 때조차 민주당 비판을 삼가거나 추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재차 강조하고 싶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존재 자체가 반MB연합의 재앙적 미래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1934~37년에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노동자 투쟁이 일어났다. 공산당이 이 시기 투쟁을 주도했다. 1935년까지만 해도 공산당은 루스벨트가 자본가 정치인이고 뉴딜은 사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다 스탈린의 인민전선 전략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 이제 공산당은 노조 지도자들을 앞세워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환상을 퍼뜨렸고, 현장 조합원들이 민주당과 편

안한 관계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단속했다. 이런 일이 10년 동안 지속됐다. 그 결과는 노동자 정당의 유실이었다. 그때 이래 지금까지 공화당-민주당 양당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진보대연합과 반MB연합의 차이점

이런 반MB연합의 근본적 문제점을 후보가 아니라 “공동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논의한다(손우정) 해서 해소할 수는 없다. 먼저, 선거 논리상 후보를 배제한 논의는 당찮다. 또, 각 정당들은 이미 자신의 사회적 기반에 근거한 정책을 갖고 있다. 동일한 계급을 대변하는 상이한 진보정당끼리라면 모를까 상이한 계급을 대변하는 정당들 간의 “공동정책 공약” 토론을 통해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순전한 몽상일 뿐이다.

다행이게도, 반MB연합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민주노동당 안에서 나오고 있다. 정성희 민주노동당 중앙연구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깨”졌다고 했다. 최규업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장은 “가장 확실하고 힘 있는 반MB전선은 ‘진보대연합전선’을 튼튼히 세우는 것”이라며 반MB연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물론 이들이 반MB연합을 일관되게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진보대연합을 통해 진보진영의 힘을 강화해야 반MB연합도 가능하다는, 모종의 단계론적 입장인 듯하다.

그럼에도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던 진보대연합을 현실 정치의 장으로 불러냈다는 의의가 있다(우리는 일찍부터 반MB연합에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서 진보대연합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반MB연합과 진보대연합의 차이점은 후자가 진보적 정당·단체·개인 들을 연결시키는 반면, 후자는 자본가 정당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계급 협력 정책이 된다는 것이다.

또, 진보대연합은 선거와 투쟁에서 진보진영의 공통 과제 수행에 필요한 실천적 협정(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진보적인 지방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인 반면, 반MB연합은 자본가 정당과의 공동 선거 강령 작성 그리고 자본가 정부 지지를 담고 있다.

진보대연합은 그 소속 단체와 개인들이 완전한 이데올로기적 독립성과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반MB연합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진보대연합을 통해 노동계급의 지도력과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인식 kis@left21.com

‘희망과 대안’ 출범을 보며 드는 기대와 우려

최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 대표적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이 주축이 된 ‘희망과 대안’이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 선거에서 ‘좋은 후보 만들기’, 정치연합을 위한 담론 형성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총선과 대선에서도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말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중립 도그마를 깨자”(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며 나서게 된 것에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발이 크게 작용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여 년간 확대돼 온 민주주의와 인권,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과 상식 등 많은 긍정적 가치들을 훼손하고 있”(창립선언문)기 때문이다. 비판적 시민사회단체들에게는 보조금을 끊는 방식으로 치졸하게 탄압하고 국정원을 동원해 사찰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은 설 자리를 잃었다.

따라서 희망과 대안의 출범은 이명박 정부나 우파들에게는 상당히 곱지러운 일일 것이다. 그래서 희망과 대안의 창립식에 보수단체 노인들이 난입해 아수라장으로 만들며 방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 진보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대안의 출범은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희망’과 ‘대안’을 기대하게끔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활동에는 격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민주당까지 포함한 정치권 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블록(을) ... 포함하는 보다 넓은 구도”(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은 이번 10.28 재보선에서 안상 상록(을)의 민주당 후보와 진보 후보 임종인 사이에서 불필요할 뿐 아니라 해악적인 후보 단일화를 압박하며 중재자 구실을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선거를 위한 전략적 동맹을 추진하면 진보적 가치는 크게 훼손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하승창 희망과 대안 상임운영위원은 “반신자유주의 진보연합은 민주당 빼자는 결로 인식된다”며 “민주당도 합의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파병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한미FTA도 비준만 남은 상태”기 때문에 “지나치게 따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파병과 FTA 반대 등 가장 중요한 진보적 가치를 민주당 때문에 제거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남는단 말인가.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맺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자고 한다. 민주당이 참여해야 선거에서 “활

로가 생길 것”(하승창)이란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한나라당의 당선을 저지한다고 해도 “한나라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민주당의 당선은 진보적 가치를 지지한 사람들에게 부패망이 돼 돌아올 것이다. 정치적 환멸 속에 우파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원석 처장의 말대로 ‘정치적 중립성’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독립성”이다.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과도 확연히 다른 진보적 가치를 위해 싸울 때만 이명박 정권을 ‘일패도지’(박원순)하게 만들 수 있고 진정한 ‘희망과 대안’이 될 수 있다.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현재의 미디어법 판결

선출되지 않은 기구가 진정한 권력을 행사하다

강동훈 기자 | kdh@left21.com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재투표·대리투표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법 자체의 효력은 있다고 판결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위조지폐라는 건 분명한데,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임시부정은 있었지만 합격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말이다(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미디어법 개악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상징과 같다. 지난해 촛불운동으로 큰 타격을 받은 이명박 정부는 올해 7월 모든 것을 걸고 미디어법 개악을 통과시키며, 4대강 사업 추진, 비정규직법 개악 같은 향후 악행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미디어법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를 무력화하고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고 현재는 판단했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미디어법 개악 직후에 ‘의원직 총사퇴’ 등을 거론하며 투쟁에 나서는 시늉을 하다가 결국 현재 판결에 모든 것을 맡기고 투쟁을 사실상 정리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었다.

아쉽게도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언론노조 등의 진보진영도 투쟁을 확대하기보다 ‘제도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에 타협했다.

그러나 이번 10·28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현재 판결에 대한 냉소적 패러디가 넘쳐 나는 것에서 보듯 대중의 불만은 매우 크다.

진보진영이 이런 불만을 조직하며 미디어법을 실질적으로 무효화시키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존재 이유를 의심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 권력자들과 얹히고 설켜 있는 이들은 결코 민주주의를 대변할 수 없다.

사진 이윤선

헌법재판소의 전력 — 권력자들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가 “MB재판소”가 되는 굴욕을 자처한 것은 — 10월 28일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에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 사법부의 본질이 부유층·권력자들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사회의 첨예한 정치적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치색이 분명히 드러나곤 한다.

사실 헌법재판소가 진보적인 결정을 내린 때는 대중의 불만을 수용해야만 하는 거대한 압력을 받았을 때였다. 물론

그조차 불완전하게 받아들이기 일쑤였다.

예를 들어, 1996년 ‘5·18 특별법’을 합헌으로 판결한 것은 법률적으로는 “위헌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전두환·노태우를 구속해 처벌하라는 대중의 거대한 반감과 운동의 요구를 “절묘하게 수용”한 것이었다. 또, 2004년에 노무현 탄핵을 기각한 것도 탄핵 반대 운동이 거대하게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지배자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는 언제나 발벗고 나섰

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순수하게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위헌”이라고 말하면서도 “남북 대치상황 등 국가적 현실을 고려”해 합헌 판결(1990년)을 내린 바 있다.

또, 1990년대 초반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토지공개념 관련 3법 그리고 얼마 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보호라는 명분으로 위헌 판결을 밀어붙인 반면, 국제중학교 설립, 교사의 정당 가입과 선거 운동 금지, 사업교사 노조 금지 등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때로는 보수층의 필요에 따라 헌법을 멋대로 재해석하기도 했는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관습헌법” 운운한 것이 그것이다.

이런 현재의 전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헌재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관·재계의 지배자들과 수백만 가닥의 끈으로 연결돼 있는 헌법재판소·사법부는 민주적 권리와 대중의 삶을 지키는 구실을 할 수 없다.

오직 대중의 아래로부터 운동과 압력만이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지킬 수 있다.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MB의 악행에 맞서 진보진영이 한데 뭉치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책임전가와 반민주적 탄압에 각개 대응하던 진보민중 진영이 ‘친재벌·반서민’ 정책에 맞서 공동 투쟁의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변화와 진보를 위해 투쟁해 온 대중단체, 진보정당, 사회단체를 망라한 이백 예순 세 단체들은 지난 달 15일에 “기층의 대중조직과 진보민중 진영의 사안별 연대를 넘어 ‘이명박 정권 퇴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공동투쟁을 전개”하고자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약칭 반MB공투본)”를 결성했다.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올 하반기에도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을 비롯해 경제 위기 책임 전가와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여전히 공문구로 남아 있고,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비롯해 국정원·기무사 사찰 등 반민주적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학살·점령을 지원하려고 또다시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하려 한다.

용산 철거민들의 파멸한 절규는 9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미디어법·4대강 사업 등도 대다수 사람들의 염원은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반MB 공투본은 이명박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투쟁할 진보대연합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친서민’ 가면을 쓴다 해도 ‘강부자’ 정권의 본질이 가려지지는 않는다.

이에 반MB공투본은 출범 선언문에서 “노동운동 말살 정책 중단”, “공기업 민영화 중단”, “국민감시 언론탄압 중단” “부자감세와 4대강 중단, 민생예산 배정”, “용산 참사 해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중단” 등 민중 12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에 맞선 투쟁을 선포했다.

반MB공투본은 11월 8일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11월 17일 전국농민대회(2차 민중대회)를 거쳐, 이명박 당선 2주년인 12월 19일에 전국의 모든 진보민중 단체와 이명박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가하는 3차 민중대회를 개최한다.

반MB공투본은 “전국의 거리와 작업장, 학교 등에서 이명박 정부의 노동자·서민 죽이기 정책의 실정을 낱알이 알리고 이에 맞선 투쟁”을 벌일 것이다.

박성환 반MB공투본 공동상황실장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 선 신지호

좌파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현대판 꺼삔딴리

‘뉴라이트’ 신지호는 1980년대 후반에 스탈린주의 좌파 운동에 몸담았다. 1991년 8월 옛 소련이 붕괴하자 신속히 우파로 전향한 인물이다.

그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노조를 꼬투리 잡아 공격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의 근무실적과 연가·출장 내역까지 요구했다. 특정 간부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지호는 ‘공직자의 품위’와 ‘정치적 중립’ 운운할 자격이 없다. 2004년 자유의연대를 창립하며 우익 언론의 유명세를 탄 이후 행적들을 보면 신지호는 노골적으로 우익들을 편들며 품위 없는 짓들을 했다.

2006년에는 <조선일보>에 경실련 전 대표를 음해하는 칼럼을 썼다가 지난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명예훼손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는 우파의 혁신을 주창하며 경쟁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이 한나라당을 기웃거리는 정치 지망생들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압승이 예상되자 공천을 신청하고 “뉴타운 후보” 대열에 합류했다. 뉴타운 공약 남발이 서울시장 오세훈과 충돌을 빚자 당선 직후 ‘반드시 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MB악법에도 선봉대로 나섰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불법 폭력 시위 단체라며 진



보적 시민사회단체 지원 중단을 주장했지만 폭력 시위를 주도한 고엽제전우회나 국민행동본부 같은 우익 단체들은 오히려 감쌌다.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는 “그 사람들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하고 반문했다. 이 단체들은 공익 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몇 억 원씩 정부 보조를 받는다.

국정원의 국내 업무 범위 제한을 해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고 일명 ‘마스크법’이라 불리는 집시법 개정안, 독재 정권의 과거 의문사 등을 파헤치려 만든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특별법 폐지안’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용산 참사를 “전철역의 반대한민국 도심 테러”(1월21일 국회)라고 비난했다.

MB의 ‘완장맨’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신지호는 자신의 좌파적 지문을 지우기 위해서 통합공무원노조의 등장에 더 광분하고 있다.

김문성 기자 | enlucha@left21.com

갈피를 못 잡는 정부의 신종플루 대책

백신을 무상공급하고 휴교와 유급 휴가를 확대하라

전 세계가 신종플루 확산으로 공포에 휩싸였다. 신종플루 사망자가 1천 명을 훌쩍 넘어선 미국은 지난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동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확산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대유행 수준의 경고 단계를 하향조정하는 데에는 2~3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WHO는 가난한 국가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경고했다. WHO는 선진국한테서 백신을 기증 받아 1백여 곳의 개발도상국에 제공할 계획을 세웠지만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조차 백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할지 의문이다.

한국에서도 신종플루가 경악스런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10월 초에는 환자가 하루 평균 8백여 명이 발생했지만 10월 마지막 주에는 열 급질이 훨씬 넘는 1만 명씩 환자가 발생했다. 신종플루 때문에 휴교한 학교 수도 급격히 늘어났다. 11월 2일 휴교한 학교는 5백28곳으로 겨우 3주 만에 2백60 급절 이상 늘었다. 국가재난단계도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처럼 신종플루가 급속도로 확산한 데에는 이명박 정부의 여처구니없는 대책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 겨우 한 달 전 쯤에 질병관리본부는 신종플루를 계절 독감으로 선언하고 국가대응태세도 ‘평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가을이 돼 날씨가 쌀쌀해지면 신종플루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명백했는 데도 말이다.

10월 중순부터 신종플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할 때에도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뒷북이었다. 확진검사 없이 타미플루를 처방하라는 지침은 1주일이나 늦었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은 확진검사를 받으려고 병원에서 2~3시간을 기다렸고, 검사가 폭주해 결과가 나오는 데도 며칠이 더 걸려 적절한 투약시기를 놓쳤다.



불안에 떨고 있는 환자들(이대 목동병원) 무대책 정부가 만든 현실

사진 임수현

전국의 약국에 타미플루를 배포한 것도 10월 말이 돼야 이뤄졌다. 이것도 ‘지르고 보자’ 식으로 발표해 정작 치료약을 구비하지 못한 약국이 속출해 환자들을 헛걸음치게 만들었다.

그나마 지금 수준의 타미플루 수요만으로도 한 달이면 비축량은 동이 날 것이다. WHO가 타미플루를 충분히 비축하라고 권고한 지 5년이 넘도록 ‘개무시’한 결과다.

백신도 문제다. 천만다행으로 2회 접종이 아닌 1회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나지만, 여전히 백신 공급 부족으로 접종의 우선순위 문제가 남는다. 정부는 입만 열면 ‘고위험군이 위험하다’고 선전했지만 정작 노인과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내년 1월이 돼야 접종할 수 있다. 접종 후 면역력이 생기는 데

2주 정도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생명을 운에 맡기라는 것이다.

백신이 부족하다보니 접종 계획도 뒤죽박죽이다. 의료인은 접종을 시작했지만 환자들과도 접촉하는 병원의 사무직 노동자는 접종을 받을 수 없다. 학생들은 11월 중순부터 접종하지만 함께 생활하는 교사는 접종 대상이 아니다!

허둥지둥

군인들의 외출과 휴가도 통제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직장에서 전염 가능성에 노출된 수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게다가 아이들은 집에서 쉬라고 하고는 정작 부모들이 직장에 나가야 하면 도대체 어찌란 말인가. 따라서 “직장 내에 신종플루 환자나 의심환자가 생

겼을 경우 유급으로 1주일 이상 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이상윤,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비용 문제도 있다. 신종플루 검사비는 15만 원 정도로 돈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연감생심일 뿐이다. 또 전 국민의 65퍼센트에 이르는 사람들의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1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학교에서 생기기 쉬운 집단 감염에도 속수무책이었다. 얼마 전까지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줄 세워 놓고 한 발열검사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오히려 추운 날씨에 학생들을 신종플루에 더 취약하게 했을 것이다.

취약한 공공의료시설의 문제점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격리병상이 턱없이 부족해 ‘대유행’ 상황에 걸맞는 치료와 질

병 통제가 불가능하다. 영남과 강원, 충청도에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하나도 없어 부산에서 발생한 환자를 서울이나 목포로 옮긴 적도 있다. 한국은 공공병상도 11퍼센트밖에 안 돼 미국(30퍼센트)보다도 현저히 낮다. 그럼에도 이명박은 의료민영화 추진에 정신이 팔려 있다.

공포가 커지자 지난달 27일 정부는 담화문을 발표해 신종플루의 “치명률은 예년의 계절독감과 같거나 낮”아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꿈 같은 소리만 해댔다.

물론, 신종플루의 치사율은 높지 않다. 문제는 너무 빨리 번져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치사율이 낮다고 해도 감염 환자 수가 엄청나다면 사망자도 비례해 많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신종플루가 변이를 일으킬 수도 있다. 타미플루에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뿐 아니라 신종플루가 사람에서 돼지로 전염된 사례도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돼지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기 좋은 ‘혼합 용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괴물’이 얼마든지 출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치사율 60퍼센트(신종플루 치사율은 0.03퍼센트)인 조류독감과 결합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신종플루가 맹위를 떨치는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조류독감으로 1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과학자들이 10년 전부터 타미플루 비축과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경고한 것은 조류독감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약한 신종플루에도 정부는 이렇게 허둥지둥대는 것이다.

더 큰 재앙을 막으려면 당장 백신을 무상 공급하고 치료제 강제 실시 등으로 무상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임시 휴교와 유급 휴가를 확대하고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의료 민영화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좌파 지도부 당선

경제 위기 책임 전가 거부 정서가 표출되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선거에서 전투적 좌파인 ‘금속노동자의 힘으로 노동해방을 여는 노동자회’(이하 금속노힘)의 김성락 후보가 중도실용노선을 표방한 ‘전조합원과 함께 고용복지희망 여는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이하 전민투) 박홍귀 후보를 누르고 지부장에 당선됐다.

이번 기아차지부 선거는 현대차지부 이경훈 위원장과 비슷한 중도실용 노선의 박홍귀 후보가 결선까지 진출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19년 연속 파업의 고리를 끊을” 박홍귀 후보를 띄워주기 바빴던 사측과 보수언론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섯 개 지회 중 가장 큰 화성지회와 정비지회에서도 금속노힘 후보가 당선했고 전민투는 소하지회에서만 당선했다. 이처럼 금속노힘과 민주파 후보들이 많이 당선한 것은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전가에 투쟁으로 맞서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열망을 보여 준다.

박홍귀 후보를 제외한 ‘민주파’ 후보들의 공약은 대체로 비슷했음에도 김성락 후보가 당선한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현장에서 보여준 금속노힘 활동가들의 실천 때문이다. 금속노힘 현장 활동가



김성락 당선자

들은 사측의 공격에 맞서 현장에서 행동을 조직했고 비정규직 투쟁 연대, 미군기지 건설 반대, 한미FTA 반대 투쟁 등에서 대체로 모범을 보였다. 반면 지난 몇 년 동안 ‘민주파’ 집행부들은 전환배치 인정, 생계잔업 2시간 양보 등 사측의 공격에 타협해 왔다.

최근 기아차는 환율 상승과 정부의 세제 혜택으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걸맞는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 퇴근시간 감시 등 현장통제가 심해졌고 노동강도도 강화되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은 쌓여 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더 센 놈”이 집행부를 장악해서 사측과 정부의 공격에 맞서주길 바란 것이다.

금속노힘이 상대적으로 힘든 부서와 젊은층 그리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것도 이와 관련 있는 듯하다.

한편, 결선에 진출한 박홍귀 후보도 상당히 득표했다. 이것은 그가 단지 정치파업 중단 등을 말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현대차지부와 통합, 복지 향상, 주간연속2교대 등 조합원들에게 솔깃한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소하리 공장에서만 전민투가 당선했는데 전임 금속노힘 집행부가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결과다.

이 점은 금속노힘 활동가들이 금속노조 탈퇴 주장이나 정치파업 비난 등 우파적 압력에 굴하지 말고 조합원들의 열망을 확실하게 투쟁으로 조직해야함을 말해 준다.

모승훈 다함께 노동조합팀

김상곤 교육감의 교사 징계 거부를 지지한다

김상곤 교육감 “교사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이며 기본권”

지난달 21일 대검찰청은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86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이라며 교사들을 범법자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의 “촛불관련자와 PD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 “무모한 진압의 결과인 용산 참사”,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 억압 등을 사실 그대로 비판했을 뿐이다.

또, 무한임시경정을 부추기는 교육정책 때문에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공교육이 파괴된다고 교육자로서 할 말을 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일제교사를 거부할 권리를 학부모들에게 알려 줬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을 파면·해직하고, 시국선언과 관련해 사무실과 전교조 건물의 이메일까지 압수수색하고 88명 교사들을 고소고발한 것도 모자라 기소까지 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정권에 맞서 진정한 참교육을 실천하는 전교조를 지속적으로 탄압해 끝까지 깃밟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의지다. 최근 진보신당이 폭로한 교육과학기술

부의 비공개 정책연구보고서는 정부가 ‘전교조 죽이기’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러나 전교조 교사들을 탄압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촛불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한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은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며 시국선언 참가 교사 징계 지침을 거부했다. 그간 임시경정교육을 찬양해 온 보수신문들은 김 교육감의 행동이 “직무유기”(《중앙일보》)이고 대통령령을 위반(《문화일보》)했다며 비난한다. 정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축소 같은 제재 방안을 내놓을 듯하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는 시민들의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로 넘쳐나고 있다.

고소고발 전으로 진행된 수사에서도 검찰은 전교조의 불법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과 촛불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모아 교사들을 권력에 굴종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

강영만

서울대병원 민들레 분회 이민자 분회장 인터뷰

“투쟁의 불씨가 어느새 꽃을 피웠어요”



서민영

서울대병원에서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드는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투쟁에 나섰다.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민주노조를 인정받기 위해서다. 이미 서울대병원에서는 간병인분회,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성원개발분회 노동자들이 정규직의 연대와 투쟁으로 승리한 바 있다. 그간 이들의 투쟁을 지켜보던 환경미화·식당 노동자들이 스스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서울대병원과 용역업체 모두 교섭과 책임을 회피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부분이 여성인 노동자들은 병원에서 홍보전과 집회를 열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민들레 분회 이민자 분회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어떻게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열악한 처지에 있었지만 어디 가서 호소할 곳이 없었죠. 오전 6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했고 응급실에서는 12시간씩 일하고 휴무도 없어서, 쉬면서 일하고 싶었어요. 자식이 결혼해도 휴무를 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집에 가야 한다고 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으면 어쩔거냐”고 되묻는 것이 현실이었죠.

그렇게 일해도 받는 돈이 1백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일한 사람도 똑같이 받았죠. 그리고 매년 고용계약을 연장하는데 20년을 일해도 1년만 계약 연장이죠. 하청노동자들은 이번에 신종플루 예방접종도 안 시켜줘요.

내가 진짜 억울했던 것은 감독들이 비용 줄인다고 청소용품을 줄인 거예요. 병원 먼지를 우리가 다 먹으며 일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기름걸레를 다섯 개에서 두 개로 줄였죠. 해도 해도 너무한다,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동료들도 ‘우리도 노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한 명이 주변의 한 명을 조직하고, 그 사람이 또 한 명을 조직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성원분회에 있는 노동자들이 나에게 작은 불씨가 준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불씨만 전해 줘야지 했는데 어느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규직지부가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만 가지고는 절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의지를 해요. 노동자들은 뭉쳐야 삽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그렇죠. 정규직도 마냥 안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인턴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민주노총이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을 많이 조직해서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는 뭉치는 게 힘입니다.

정부가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민들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이죠. 성원개발 노동자들은 그래도 기술직인데 1백만 원 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듣고 이게 용역의 삶이구나 했죠. 비정규직법 개악은 있는 사람들의 정책이고 최저임금법 개악은 서민들 죽으라는 것입니다. 1백20만 원도 안 되는 임금으로 어떻게 삽니까. 절대 못살아요. 보협은 생각지도 못하죠.

노조를 만들고 투쟁에 나서면서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집회에 가고, 연대투쟁도 하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만나면서 ‘우리 일구나,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담당해졌어요. 예전에는 감독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에만 있었던 휴가, 연차도 이제는 줍니다.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노동조합이 생기니 저들도 눈치를 봐요. 그래서 조합원들은 파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찬성률이 84퍼센트나 나왔구요. ‘TV에서만 본 것 우리도 해 보자’ 고 합니다! 사측이 교섭도 안 나오는데 파업을 해야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다고 모두 생각합니다.

인터뷰·정리 조명지 [다함께 노동조합팀](#)



박수용

10월 17일 '생생여성행동' 집회

경제 불황 속에 더 벌어지는 성 격차

‘4대 강’ 이 아니라 여성 노동자 일자리 살리기가 우선

세계 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2009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올해 성평등 순위는 전체 백 서른 네 나라 중 115위로,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 계속 떨어지고 있다. 경제 참여·기회(113위), 유사 직업 임금 평등(109위) 등이 모두 최하 위권이다. 남녀 성 격차지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8년 한국 여성의 83.5퍼센트가 대학에 가고, 여성의 70퍼센트 가량이 임금 노동에 종사하지만 여전히 평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는 여성의 삶을 더 후퇴시켰다. 남성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특히 여성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졌다. 올해 8월 고용동향을 보면, 남성 취업자수는 6월부터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했지만 여성은 여전히 감소세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의 갑절이나 된다.

50대 여성들의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중

가분의 상당수가 공공근로 등 저임금 일자리다.

여성 노동자의 70퍼센트가 비정규직이므로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 문제는 곧 여성의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분리직군제는 일은 똑같이 하면서 승진은 막혀 있고 체계적으로 임금을 차별하는 또 다른 비정규직일 뿐이다. 분리직군으로 포함된 노동자 압도 다수가 여성(우리은행은 98.6퍼센트)이라는 점에서 분리직군제는 여성차별적이다.

한국 여성들은 주요 OECD국가들과 달리, 여전히 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을 중도 포기해야 한다. 출산연령대인 30대 초반에 여성 취업자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가 그 후 다시 증가한다(소위 ‘M자 곡선’). 그러나 돌아온 여성들이 주로 얻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이다. OECD국가 중 공공 보육 지출 최하위권·전체 보육시설 대비 직장내 탁아소 비율 1퍼센

트라는 형편없는 보육 지원이 문제다. 여성들은 마음 놓고 육아 휴직을 쓰지도 못한다. 5인 미만 기업 여성 노동자의 11퍼센트만이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고용차별은 임금차별로 이어져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보다 턱없이 낮다. 여성들은 남성과 거의 같은 시간을 일하지만, 남성 임금의 62퍼센트밖에 못 받는다.

더 높은 임금,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를 쟁취하는 일은 남성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여성과 남성 노동자의 이익은제로 삼 관계가 아니다. 딸, 부인, 동료 여성들이 차별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수록 남성 노동자들의 삶도 팍팍해진다. 위기 속에서도 부자들의 이윤은 보장하면서, 보육도 저임금도 비정규직도 모두 여성들에게 전가하는 이 체제는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 둘이 모두 도전해야 할 대상이다.

최미진 기자 | lionlady@left21.com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의 진정한 대안

이명박 정부 일각에서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친 사용자 성향 노조를 통해 노사관계에 개입할 수 있고, 사측의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면 노조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금지 등이 저들의 바람대로 민주노조운동에 타격을 줄지는 확실치 않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서 재계의 입장이 정부와 엇갈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재계는 “투쟁지향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경합하게 되면 노조 사이의 경쟁 과열과 빈번한 이합집산으로 인해 기업문화와 노사 간의 신뢰가 파괴될 것”(경총)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한 안전장치를 두려고 하지만 복수노조 허용 자체가 초래할 효과에 대한 걱정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그동안 ‘유령노조’가 설립돼 있어 자주적 노조 결성이 가로막혀 있던 작업장에서 노조 결성에 나설 수 있고, 상대적 우파 노조들이 있던 곳에서는 더 좌파적인 노조가 만들어 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인 단결권의 원칙에 따라 복수노조 금지는 안 된다”며, 복수노조 허용을 요구하는 것은 옳다.

한편, 노동운동 일각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기존 민주노조가 약화된다’며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최근 이승철 혁신네트워킹 운영위원은 “복수노조 허용을 지지하는 것은 민주노총 파괴를 방조하는 전략적 우편향”이라며 복수노조 허용에 반대 주장을 폈다. 물론, 그의 말마따나 “1국가 1노총, 1기업 1노조” 같이 노동자들이 가급적 크게 단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이 허용되는 가운데 투쟁 속에서 나아갈 방향이지 정부가 강제해선 안 된다. 삼성과 포스코에서 민주노조 건설 시도를 억누른 핵심 근거가 복수노조 금지 조항 아니었던가.

복수노조 허용이 민주노조에 불리하다는 생각은 전체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확대라는 대의보다는 기존 노조의 기득권에 서만 문제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한국노총과 “복수노조 전면 도입 법제화 반대와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신사협정”(이승철 운영위원)을 체결하라는 어긋난 주장도 하는 것이다.

민주노조의 세력 확장 여부는 궁극으로 투쟁력에 달려 있다. 한때 전투적·민주적이었던 노조조차 활력이 감퇴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면 친사용자 경향 집행부가 들어서곤 하지 않았는가. 재계가 우려하듯이 “투쟁력이 있고 민주노조의 활동이 왕성”하다면 복수노조 허용은 유리한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열망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한 투쟁에 힘쓰면서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는 악법 폐기를 주장해야 한다. 다수의 노동자들은 복수노조일 경우 “임금, 복지 등 조합원의 권익에 충실한 노조를 선택할 것”(〈참여와 혁신〉여론조사 결과)이라고 답변했다.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

한편, 노조활동 위축을 목적으로 법으로 임금지급을 금지하려는 공격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만 전임자가 사측에게 임금을 받는 현상유지가 대안일 수는 없다.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한 강제 규제에 반대하는 동시에 노조 스스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조합비로 전임자 임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물론, 월급대비 조합비 비율이 1퍼센트대인 현실에서 전임자 임금을 노조가 부담하면 재정 부담이 막대한 것이 사실이고, 중소노조의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클 것이다.

그럼에도 평조합원들의 주도권을 확대하고, 노조 민주주의를 확대하려면 조합비에서 전임자 임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 부족한 재원은 임금인상을 통한 조합비 증대와 상급노조의 지원 확대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조합비에서 전임자 임금이 충당되고, 현장 조합원들에 비해 특권적 혜택이나 다름없는 사측의 편의제공 등이 사라진다면 노조가 훨씬 건강해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물론, 궁극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주의와 자주성은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력과 이를 제대로 대변하려는 노조 지도부의 노력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6자대표자회의에 기대를 건 나머지 투쟁 조직을 등한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노총과 연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민주노총의 요구와 투쟁이 한국노총 수준으로 하향대서는 안 되며, 한국노총 지도부가 배신적 타협을 할 경우 언제든지 독립적으로 투쟁할 준비를 해야 한다.

또 두 법안 시행에 맞서는 투쟁은 다른 주요 현안을 둘러싼 투쟁과 연결돼야 한다. 비정규직법 개악 반대 투쟁, 공기업 선진화 반대 파업, 공무원노조·전교조 탄압 방어 투쟁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중남 [다함께 노동조합팀장](#)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특집 ③

동독의 민주주의 혁명에 참가했던 좌파 활동가가 전하는

가비 엔겔하르트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의 경험과 자신과 동지들이 시작했으나 완수하지 못한 혁명의 과업에 대해 말한다. 가비 엔겔하르트는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동독의 주도적인 지하 활동가였고 현재 좌파당 디링케에서 활동하고 있다.

1989년 가을의 사건과 동독 국가의 종말의 기원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같은 해 봄과 여름에 일어난 일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당연히 역사적으로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1989년 혁명은 1953년 동독, 1956년 폴란드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발생했던 반란의 전통에서 있다.

동독에서 사람들은 서독으로 떠나는 것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했다. 1989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정치적 상황이 악화된 것 — 동방블록에서 특히 심각했다 — 이 사건의 규모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당시 나는 우리 집과 가족과 생계를 포기한 채 동독을 떠나지 않기로 마음먹은 조직에 속해 있었다.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싶었다.

국제적 위기, 정치·사회적 개혁 열망에 대처할 수 없는 동독 지배자들의 무능, 중국 정부가 뎐안먼 광장에서 시위대를 학살한 것을 동독 지배자들이 지지한 것 등이 모두 사건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나는 칼마르크스스타트(오늘날의 캄니츠)의 소규모 좌파 조직 — 나중에 ‘통합좌파’로 발전했다 — 의 회원이었다.

1981년에 평화와 인권 운동에 관심을 가진 청년이었던 나는 지역 신문사 타이피스트 일자리를 잃은 상태였다. 많은 다른 이의 삶은 훨씬 더 힘들었고 심지어 수감된 사람도 있었다.

변화의 바람

당시에 우리는 대부분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교회에서 모임을 가져야 했다.

교회는 우리가 우리 국가나 다른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우리는 크루즈 미사일, 환경 보호와 인권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뎐안먼 광장의 학살을 들은 뒤에는 중국 상황을 논의하는 모임을 하기도 했다.

우리는 소수의 사람이 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교회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왔다. 비록 그중 절반은 동독 비밀경찰들이 낯 같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저항을 하면 뎐안먼 광장과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워 했다.

비밀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체포를 막기 위해 모임을 끝내고 다 함께 무리를 지어 교회를 나가자고 제안했다.

1987년부터 동독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 상점에는 생필품이 모자랐고 1989년에 이르면 사람들은 더는 참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해 10월 7일 — 동독 국가 건국 40주년 기념일 — 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 교회를 바치고 나와 거리 시위를 벌



베를린 장벽 붕괴를 기념하는 베헤

인 것이었다.

교회 그룹에 속한 배우와 사람 들은 다른 조직들과 공동으로 경제 위기와 ‘노이에 포름’(민권 운동)에 관한 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원래 이 토론회를 도심 극장에서 열려고 했으나 집권당 관료들이 불허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곳에서 모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리가 도착하자 우비를 입은 준군사 특별수사대가 우리를 포위했다. 그들은 우리가 모이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극장에 갔던 사람들은 정부에 의해 모임이 취소됐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뎐가 하고 싶었고 행진을 시작했다. 대형 칼 마르크스 동상이 있는 도심에서 명사들이 동독 건국 축하 기념식을 열고 있었고 일부는 그곳으로 가서 시위를 벌이고 싶어 했지만 다른 이들은 충돌을 우려해 반대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뎐안먼 광장의 학살 이미지가 떠올랐던 것이다.

우리는 중심가 전자 정류소까지 행진하

기로 결정했다. 휴일에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안전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행진을 보장 받지 못했다. 8백여 명의 시위대 앞으로 많은 수의 경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우리 뒤로는 특별수사대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들은 볼데포로 우리를 공격했고 26명을 연행했다.

동독 국가는 그런 탄압으로 사람들이 거리에 나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

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

그날 도로변에 있던 보통 사람들도 공격받았던 것이다. 경찰은 ‘좋은’ 사람과 ‘악당’을 구분할 수 없었고 행인들도 연행했다.

중대한 국면

그날 시위 후 우리는 중대한 국면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친구나 친지 중에는 사병들이 패 있었는데, 그들의 말로는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일보직전이고

군인 호송 트럭이 길가에 배치돼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군 자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다. 사병들이 시위대에 호의적이고 심지어 사병 자신이 시위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과연 시위대 탄압에 군인들을 동원할 수 있을지 확실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동독 비밀경찰 수장 에리히 미엘케는 1953년의 사태를 반복할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다. 당시에 동독 전역에서 대중 항쟁이 발생해 동독 주도 러시아군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진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이번에는 그런 도움을 바랄 수 없을 거라고 뜻을 밝혔다. 우리는 그것에 자신감을 얻었고 한달 동안 우리 시위의 규모는 1천 명에서 5만 명 — 캄니츠의 인구는 35만 명에 불과하다 — 으로 늘었다.

사람들은 더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고, 그동안 쌓여 온 온갖 고통과 분노가 폭발했다. 갑자기 사방에서 정치 토론이 벌어졌다.

동시에 세 곳의 교회에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한 곳만으로는 팔러드는 참가자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신문들도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게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집권당 당원들도 개혁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지만 패튼은 변화였다. 집권당이 사태 변화를 통제할 방법은 없었다. 혁명이 진행중이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행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소리쳤다. “우리가 인민이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했다. 운동은 아직 공장으로 확산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곧 그렇게 됐다.

당시 우리는 억압적 국가 관료를 제거하면 동독에 새로운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깨달았듯이 동독의 이른바 ‘사회주의’를 기초로 해서 진정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당시 우리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민주적 권리의 상징적 요구였기 때문에 집권당이 베를린 장벽을 계속 닫아두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국경을 개방하자 위기가 심화했다. 서독 사람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동독의 ‘사회주의’란 모든 종류의 생필품 부족과 민주적 권리의 박탈을 뜻했다. 서독 자본주의는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거리의 구호도 “우리가 인민이다”에서 독일 통일을 뜻하는 “우리는 하나의 인민이다”로 변했다. 1990년 1월에 시위대의 규모는 15만 명으로 늘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우리 중 일부의 사람들은 우리가 혁명을 일으켰으나 결국 우리는 패배했고 자본주의가 이겼다고 생

각하기 시작했다.

그 뒤로 몇 주 후에야 나는 운동의 성격 변화를 정치적 요구가 사회경제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반영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통일 요구는 사실 더 나은 생활수준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운동을 두려워한 동독과 서독의 지배자들은 독일을 통일하기로 서둘러 합의했다. 그것은 위로부터의 통일이었다.

끝나지 않은 혁명

그것은 동독 좌파 지도부의 약점이 낳은 결과이기도 했다. 항쟁이 시작됐을 때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가진 집단이 아니었다. 따라서 막상 운동이 부상하자 이데올로기적으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동독 국가에서 경제 불황이 지속되자 1989년의 희망은 곧 사라졌다. 대규모 공장 폐쇄가 진행됐고 실업률이 치솟았다.

새로운 국가의 통합 지배자들은 우리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것이 더 많은 실업과 공장 폐쇄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늘날 동독의 실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사이에는 과거에 대한 향수가 존재한다. 사람들은 일자리, 주택과 기초적 사회보장이 제공하는 안정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동독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는 불가능했다.

오늘날 경제 불황의 여파로 서독 노동자들조차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옛날이 더 좋았다고 회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따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하고 있기도 하다.

1989년 혁명이 발생한 지 불과 2년 뒤에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번에는 공장 폐쇄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2004년에 정부의 사회보장 축소 시도에 맞서 다시 한 번 투쟁에 나섰다.

이 세 번의 투쟁 물결은 모두 월요일 저녁에 시작됐고 곧 ‘월요일 시위’로 불리게 됐다.

지배자들은 여전히 1989년의 경험을 공포심을 가지고 회고한다. 그리고 동독과 서독의 지배자들이 더는 분리돼 있지 않은 오늘날 상황에서 우리가 단결된 투쟁을 벌일 가능성은 더 크다.

1989년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떻게 사회주의는 위로부터의 명령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래로부터 제기돼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살아 있는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왜 당시의 혁명이 원하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할 것이다.

번역 김용욱 기자

새로운 사회의 맹아를 보여 준 1989년 동유럽 혁명

안드레자 지프코빅과 블라디미르 운코프스카-코리카가 1989년 동유럽 항쟁이 오늘날 주는 교훈을 고찰한다.

1989년 동유럽 대중 혁명은 공산당 독재를 무너뜨렸다. 이 나라들의 실제 성격은 사회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사회를 지루로 변하는 과정을 반영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통일 요구는 사실 더 나은 생활수준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1989년 전에 이 체제는 대단히 안정적으로 보였다.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당시 지배적이었던 비판주의를 이렇게 표현했다. “미래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사람 얼굴을 군화가 밟고 있는 것을 상상하면 된다.”

일당 국가의 자유주의적 반대자들도 비슷한 비판주의를 가지고 있었다. 착취 체제와 불평등을 폐지했다는 공산당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말이다. 나중에 체코 대통령이 된 바츨라프 하벨은 유일한 저항 수단은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반체제 인사들이 국가와 독립적으로 사회 내에 새로운 민주적 결사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전략은 모두 독재자나 그의 체제에 도전하려 들지 않았다. 어떤 이는 기존 국가를 통해서만이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

들은 공산당이 좀더 민주적으로 변하기를 희망했다.

이런 소망은 러시아 령크가 1956년 헝가리 개혁 운동과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을 진압했을 때 산산조각났다.

스탈린주의 국가들은 획일적 국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방과의 군사 경쟁 압력으로 형성됐다. 스탈린주의 정부들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희생시키면서 무자비하게 생산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것은 주기적으로 체제를 뒤흔드는 반란을 낳았다. 자유주의적 반체제 인사들의 생각과 달리 이들 나라의 노동계급은 약하지 않았다.

1980년 폴란드 노동계급은 투쟁의 과정에서 1천만 명을 포괄하는 노조 운동, 연대 노조를 조직했다. 연대노조는 공장위원회와 작업장 대의원 모임에 근거한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운영됐다.

이것은 경찰 국가의 질서를 뒤흔들었다. 노동자들이 드디어 ‘공장의 주인’이 되었던만큼 ‘갓’이거나 체제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89년 혁명은 전체주의 국가들을 무너뜨렸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 혁명은 소수에 의한 부의 독점에 도전하지는 못했다.

국가 관료와 기업 경영자 들은 공산당 당

원종을 찢어 버리고 사회를 계속 지배할 수 있었다.

불과 10년 뒤 시애틀에서 분출한 반자본주의 운동은 1989년이 ‘역사의 종말’을 가져왔다는 거짓말을 산산조각냈다.

그러나 반자본주의 운동의 일부 지도적 활동가들의 사상은 1989년 당시 동유럽 반체제 인사들의 전략과 유사했다.

반자본주의 사상이 좀 흔래워이는 ‘권력을 잡지 않고 세상을 바꾸자’ 하고 주장했다. 그런 전략들은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의 특권층을 비호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준비가 된 자본주의 국가에 도전하지 않는다.

대중적 압력을 넣어 기존 국가를 조금씩 진보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전략도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1989년 혁명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 평의회, 공장위원회와 노동자 회의 등 대의제로 운영되는 대중적 저항 조직을 결성해 투쟁을 조율했다.

이런 조직들은 계급이 폐지된 새로운 자치 사회의 맹아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1989년의 사건들은 그런 사회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살짝 보여 줬다.

다음 번에 우리는 혁명을 국가의 경제 너머, 민주주의 최고봉에 이를 때까지 밀어붙여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정취해야 할 세계가 있다.

번역 김용욱 기자



2001년 최저 임금을 인상하지 말라는 IMF ‘권고’에 항의하는 우크라이나 노동자들

자본주의의 승리?

크리스 뱌버리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쇼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흔히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1년 소련의 몰락을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승리로 받아들이린다.

실제로, 전 세계 좌파의 압도 다수가 스탈린주의 국가를 일종의 ‘사회주의’로 여겼다. 그들은 베를린 장벽 붕괴를 보면서 함께 몰락했고 비판주의에 빠졌다. 그들은 사회주의와 혁명이 실현 불가능한 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유럽의 중도좌파 정당들은 신자유주의를 기꺼이 수용했고, 영국의 신노동당은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의 영도 아래 기꺼이 수용했다. 오늘날 그들은 ‘시장의 대안은 없다’는 말을 영무세처럼 반복한다.

그러나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그 이전의 스탈린주의 국가자본주의처럼 동유럽의 민

중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지금 서유럽도 경제 위기로 고통 받고 있지만, 동유럽의 상황은 처참하다.

헝가리, 폴란드,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에 이어 지난해 몰도바와 라트비아도 IMF ‘구제 금융’ 지원국에 포함됐다. 당연히 긴축정책과 민영화가 지일 조건이다.

빈곤, 영아사망률, 기대 수명 등으로 동유럽과 서유럽 간 격차를 비교했을 때, 격차는 지난 20년 동안 더 커졌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불과 몇 년 뒤 경제 위기가 유럽을 강타했고,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뒤따랐다.

1990년대 옛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이 분열하면서 1945년 이후 처음으로 유럽에서 전쟁이 발생했다.

지배자들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사회주

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떠벌리기 좋아했고 대다수 좌파가 이 말을 진실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75년 만의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위기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본래적 성격이라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989년에 《쇼셜리스트 워커》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축하했다. 우리는 스탈린주의 정권들의 붕괴로 진정한 사회주의 운동이 성정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오늘날, 노동계급 저항은 아직 [자본주의와의] 결전을 앞두고 있을 정도의 수준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동유럽과 서유럽에서 모두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1989년이 자본주의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거짓말을 폭로할 새로운 급진 좌파를 건설할 수 있다.

번역 김용욱 기자

1989년 혁명 시간표

1980년

1980년 7월 폴란드에서 식품 가격이 급등하자 파업이 벌어졌고, 그 결과로 연대노조가 탄생했다. 연대노조는 광범한 지지를 받았고 폴란드 정권에 도전했다. 비록 연대노조는 1980년대 내내 탄압받았지만 폴란드 정권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이었고, 정권은 그 타격에서 회복할 수 없었다.



베를린 장벽의 보조병들

1989년

6월 4일 수년간 지속된 위기로 반체제 세력들은 폴란드 정부가 선거를 실시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었다. 이제 자유시장을 지지하게 된 연대노조가 선거에서 승리했다.

7월 6일 동독인 수천 명이 동독,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 소재 서독 외교 공관을 찾아가 망명 신청.



동베를린에서 벌어진 노동자 시위

8월 24일 폴란드의 타데우시 마조비에츠키가 소련 블록에서 최초의 비공산당 출신 총리가 됐다.

9월 11일 헝가리가 서독으로 향하는 국경을 개방했다. 동독 난민들의 대규모 서독 이주가 시작됐다.

10월 7일 러시아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동독 방문 중 간접적으로 개혁을 요구했다. 동독 정권에 반대하

는 첫 시위가 시작됐다.

11월 4일 동독인 1백만 명이 동베를린 당 출신 총리가 됐다.

11월 11일 헝가리가 서독으로 향하는 국경을 개방했다. 동독 난민들의 대규모 서독 이주가 시작됐다.

11월 9일 동독 시위대 수천 명이 국경으로 몰려가 국경 개방을 요구했다. 베를린 장벽이 폭렸고, 사람들은 축하의 의미에서 장벽을 허물었다.

11월 10일 불가리아 정부는 장기 집권한 독재자 토도르 지프코프를 권좌에서 몰아냈다.

11월 17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한 학생의 항의 행동이 경찰과 충돌을 낳고, 이것이 계기가 돼 ‘벨벳 혁명’이 시작됐다.

11월 20일 50만 명이 프라하에서 시위를 벌였다.



루마니아인들의 시위를 탄압하는 경찰들

11월 27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두 시간 총파업 발생.

12월 16일 루마니아 전역에서 시위가 발생.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세스쿠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진압을 시도했으나, 노동자 파업과 대규모 시위로 차우세스쿠 정권은 몰락했다.

12월 25일 차우세스쿠와 그의 부인에 대

한 사형 집행.

12월 29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공산당 41년 통치 종식.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 통일.

12월 9일 전 부두 노동자이자 연대노조 지도자인 레흐 바웬사가 폴란드의 첫 대선에서 당선.

번역 김용욱 기자

번역 김용욱 기자

강제 추방당한 이주노동자 미누 국제 전화 인터뷰

“한국 노동계가 이주노동자 문제를 신경써야 합니다”

한국에서 18년 동안 살아오다가 최근 표적 단속돼 고향인 네팔로 강제 추방당한 이주 노동자 문화활동가인 미누 씨와 국제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강제 추방당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갑작스럽게 나오게 됐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내려라고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물 한방울 입에 못 뱉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을까 생각하니 슬픔니다. 18년 동안 지나간 꿈을 끈 느낌이에요.

이명박 정부가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고 강제 추방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도 토끼몰이식 단속이 있었 습니다. 올해는 그보다 더 강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를 줄이려고 단속한다는데, 더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나라가 어렵

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 공장들이 요청하면 한국 정부가 각 나라에 요청해서 이주노동자들을 들여요죠.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공장을 이동하게 해달라고 해도 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토끼몰이식으로 잔인한 단속을 계속한다면 큰 책임을 물을 날이 올 것입니다.

몽골이나 필리핀에서는 한국인이라고 하면 욕하는 일도 있다고 해요. 심지어 폭행까지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정부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이주노동자들도, 한국 국민들도 상처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코리아, 다문화화를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이 아시아 나라들 돌면서 [각국의 정부들과] 협상 등 여러 가지 하는데, 왜 한국에 있는 그 나라 국민들에게 무자비하게 하나요?

다문화화 외치면서 다른 문화는 문화가 아닌 것처럼, 이주민들을 배려하거나 대우해 주거나 이런 것은 너무 생각을 안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하실 말씀은?

이주노동자 문제는 한국 노동계에서 신경 써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한국 노동계가 그동안 이주노동자 문제에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노동자들도 이주노동자들을 올바르게 보지 못해서 현장에서 [한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간에] 충돌이 생기기도 했어요. 같은 노동자들끼리 싸우게 된 거죠.

한국 노동계가 한국 노동자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민해서 얘기해 줘야 해요. 그래야만 좋은 노동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이주노동자들은 물론 자기들이 필요해서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국 쪽에서 더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이예요.

인터뷰·정리
이현주 기자 | hyunju43@left21.com

정부의 이주자 억압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

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정부는 지난해 말 ‘내국인 노동자 고용 보장’을 핑계로 이주노동자 신규 인력의 유입을 2008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고, 특히 중국 국적 동포들의 입국을 대폭 제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등록 체류자 단속·추방을 대폭 강화했다. 2008년에 단속돼 추방된 사람이 2007년보다 65퍼센트가 증가해 3만 5백여 명이었고, 올해도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렇게 미등록 이주자들을 단속하지 않으면, 이들이 건설 현장 등에서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은 이주자들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에 고용불안이 생긴 것이 아니다. 건설 자본가들은 최소한의 인력만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하청으로 돌린다. 그리고 하청업자는 똑같은 이유로 또 다른 하청을 만든다. 바로 이런 건설 자본가들이 문제이고, 이것을 비호해 온 정부가 문제인 것이다. 이런 문제는 이주자들을 내쫓는다고 해서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또 지난해 말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숙박비와 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해 사업주들이 더 싼값에 이주노동자를 부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바로 이런 것이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노동 조건 등을 후퇴하게 하는 압력을 형성한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해 인간사냥식 체포와 추방을 일삼는 것은 미등록 체류자들을 모두 추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이간질

이렇게 이주자들의 처지를 더 악화시켜 이주노동자들을 더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으로 부리려는 것이다. 이주자들은 경제 위기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본국으로 돌아가느니 힘들더라도 이곳에서 더 나은 조건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정부는 고용 불안, 임금 삭감, 복지 삭감 등에 대한 한국 노동자들의 불만이 자신이 아니라 이주자들에게 향하길 바란다.

특히 정부와 기업에 맞서 투쟁할 자신감이 충분치 않은 노동자들에게는 이주자들이 손쉬운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

다. 단결해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자 집단의 일부를 배척하고 이들과 분리하는 순간 노동자들은 진정한 적과 맞서 싸울 힘과 자신감이 마비된다. 1870년에 갈 마르크스는 영국 노동자들이 아일랜드 노동자들을 멸시하고 적대하는 것을 두고 “영국 노동계급이 자신의 조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의 비밀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적은 오늘날 노동계급에게도 중요한 교훈이다.

지배자들의 이간질은 언제나 성공하는 게 아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함께 노조로 조직해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며 투쟁할 것인지 아니면 이주노동자들을 내쫓으라고 요구할 것인지 하는 주관적 대응에 달렸다.

올해 경기도 중서부 건설노조, 금속노조 소속 작업장 몇 곳의 사례처럼 노조가 앞장서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해 일 자리를 지키려고 투쟁하고 승리한 고무적인 사례들이 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있는 작업장에서 실현될 수 있다. 이 교훈이 이 신문을 읽는 모든 노동자 독자들에게도 실천 지침이 되길 바란다.



119주년 노동절 이주노동자 집회

사진 임수현



2007년 3월 이라크 침략 4년 규탄 국제공동반전행동에서 노래하는 미누

(레프트21) 사진 자료

한국인 노조의 이주노동자 취업 제한 요구는 왜 해결책이 아닌가

경제 위기 때문에 곳곳에서 대량 실업, 임금 삭감, 빈곤이 나타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기업·부자들에게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주들의 고통 전가에 맞선 투쟁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런 집단적 저항을 두려워하는 정부와 기업주들은 늘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 애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

분열

경제 위기 시기 노동자들의 보수적 정서를 겨냥한 지배자들의 이런 시도는 때로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예컨대, 올 초 영국 건설·석유정제 공장 노동자들은 “영국인 일자리는 영국인들에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비공식 파업을 벌였고, 지난 5월 한국의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의 파업 슬로건 중엔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즉각 철수를 요구한다”, “이주노동자 제한하여 고용안정 쟁취하자” 등이 있었다. 원칙 있는 노조지도부라면 해선 안 될 타협을 한 것이다.

일자리와 임금 삭감에 맞서 파업과 시위를 벌여 싸우는 것은 정당하다. 노동자들을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하도급 체제에 맞서 싸우는 것도 옳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요구들은 영종한 사람들을 적으로 삼고 있다.

내국인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이 하락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가 예전에 먹고 살려고 중동·독일 등으로 이주했듯 이주노동자들도 먹고 살려고 이 나라에 온 것뿐이다. 이런

이주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처지로 내몰아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 누구인가? 또 열악한 처지의 이주노동자들을 내국인 노동자들과 경쟁시켜 임금과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시키는 것은 누구인가? 정부와 기업주들이야말로 이런 문제의 주범이다.

“영국의 일자리는 영국인들에게”라는 구호를 맨 처음 사용한 것은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이었다. 이명박은 취임 초부터 “불법 체류자가 활개쳐선 안 된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부추겼다. 이런 분열 지배 덕분에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영국의 정규사와 한국의 건설사들은 경제 위기에도 높은 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런 요구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헛갈리게 하고 우익과 인종차별 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게 된다. 이명박 같은 우파 정부가 힘을 받게 될 것이고, 우파 정부는 그 힘으로 우리의 일자리와 임금을 공격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요구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지 못한다. 설사 이 요구가 성취돼 당장 이득을 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노동자들 사이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 가입시켜야 한다. 또 이주노동자들에게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에 반대하는 투쟁에 내국인 노동자들이 함께해야 한다. 이런 분열의 씨를 잘라내는 과정을 통해서만, 경제 위기 시기 지배자들의 고통 전가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다.

조명훈 기자 | jomh@left21.com

Letter@left21.com

독자토론광장

11월 16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기사에 대한 의견,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활발한 기고로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토론광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려대 환경미화 노동자 투쟁

청소 노동자들의 폐지 수입까지 강탈하려는 용역업체

고려대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한 달 임금의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학내에 굴러다니는 광고지, 버려진 책, 신문 등 폐지를 수거해 생계비에 보태왔다. 그래봤자 한 달에 2만 원~7만 원 정도다. 그런데 고려대와 계약을 맺은 청소용역업체 현대씨애크알은 앞으로도 계속 폐지를 주워 팔면 “사규 등에 의거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노동자들을 협박했다. 용역업체인 현대씨애크알은 황당하게도 ‘등록금 동결로 용역비가 줄어’ 용역업체가 폐지 수입까지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주식에만 7백30억 원을 쏟아붓는 고려대에서 벌어진 일이다. 고려대 환경미화 노조는 폐지

수거를 하지 않는 대신 월 1만 5천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보안까지 제시했지만, 업체 측이 거부했다. 이 황당한 조치에 노동자들은 분노했다. 조합원 총회에 2백57명의 조합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12년 동안 학교에서 일해 온 최경순 씨(70세)는 “12년 동안 고대에서 설움을 겪어왔다. 그런데 지금 폐지마저 빼앗아가려 한다”며 분노했다. 고대 환경미화 노조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일부를 빼 1천7백만 원의 투쟁기금을 모아 왔는데, 이번 투쟁을 위해 이 기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원들은 “원청인 고려대학교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매일 4시에 총회(집회)를 여는 투쟁 계획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고려대 학생들의 분노도 컸다. 학

생들은 학생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성명서·리플릿을 작성하고 노동자들과 함께 점심선전전을 하기로 결정했다. 총학생회, 문과대·정경대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대학생다함께 고려대 모임, 전 출교생들 등은 집회에 참가해 노동자와 학생들의 끈끈한 연대를 과시했다. 전 출교생인 김지윤 학생은 “출교 때, [환경미화 노조가] 1백만 원씩 모아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고마웠다. 이제 우리가 받은 연대를 돌려드리고 싶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나는 투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었냐. 서명운동 같은 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지지

를 표시했다. 다른 대학 환경미화 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구협의회, 진보신당 성북구위원회 등 단체들도 연대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투쟁은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연대했을 때 힘을 발휘했다. 지난해 9월 성신여대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학생들과 연대해 승리했다. 당시 학생들은 3일 만에 6천 5백 명이나 서명에 참가해 뜨거운 지지를 보여 줬다. 연세대에서도 학생들이 연대하면서 환경미화 노조가 설립되고 해고자들을 복직시켰다. 원청인 고려대 당국은 ‘폐지 투쟁’을 모른척 하고 있다. 용역업체와 원청인 고려대 당국에 맞서 노동자와 학생들이 연대해야 한다.

안형우 고려대 전 출교생

외고 출신인 내가 외고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요즘 외고 폐지 논란을 접하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어두운 기억이 떠올라 새삼 내 폐부를 찌르는 듯하다. 나는 외고 안에서 힘겨운 10대 시절을 보내야 했다. 그곳은 내게 말 그대로 ‘충성없는 전정터’ 그 자체였다. 학교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문대 합격을 강조했고 철저히 그 것을 겨냥한 교육을 시켰다. 전공 외국어 공부는 언제나 그 다음이었다. (나는 러시아어 전공이었지만, 고3 때 러시아어 수업은 입시교육을 위해 파행적으로 진행됐다.) 모든 시험에서 동료 학생에게 밀리지 않으려면 사력을 다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등수가 사정없이

떨어지고 낙오자 취급 받는 듯한 분위기가 때문이다. 오죽 경쟁이 치열했으면 이를 지켜 보는 교사들조차 “너희는 네 옆의 친구가 죽어 췌으면 좋겠냐” 하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 3년 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친구들을 입시경쟁의 ‘보이닝’ 적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우리 마음을 시나브로 지배한 셈이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를 비롯한 친구들의 심성이 하루하루 망가져 가는 건 당연했다. 어느날 미술시간에 특정한 주제 없이 작품을 만들어 발표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친구들이 발표한 작품 모두가 소외, 두려움, 외로움 등 자신의 억눌린 심정을

토로하는 것 일색이었다. 보다 못한 미술교사가 발표를 중단시켜야 했다. 내가 어쩌다 시험에서 점수가 떨어질 때, 등 뒤에서 나를 홍보며 좋아하는 친구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까스로 분을 참은 게 몇번인지 모르겠다. 하긴, 나 또한 수능을 망치고 울먹이는 친구를 위로하기는커녕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행이다’ 하고 생각할만큼 심성이 뒤틀려 버렸으니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 우리 학교 주변에 안개가 끼는 날이 많아 우리는 자조적으로 학교를 ‘안개 낀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부르곤 했다. 그런데 내가 ‘바스티유 감옥’을 ‘출

소’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여전히 그 감옥엔 자발적으로 들어가려는 ‘재소자’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 이것은 내게 승자와 패자 모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치킨게임으로만 보인다. 지금 진짜 감옥에 갇힌 내가 바라건대, ‘안개 낀 바스티유 감옥’은 이제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한다. 그래서 여전히 숨막히는 입시경쟁·줄세우기에 고통받는 학생들이 잠시나마 숨 돌릴 기회라도 얻으면 좋겠다. 다만, 그것은 지금 외고 문제에 대해 기만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선 도전과 결합해야 실현 가능한 꿈일 것이다.

김영익 앙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한국노총의 대정부 투쟁 선언

‘정책 연대’가 아닌 ‘투쟁’연대로 나아가자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반대,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정취’를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월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연대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민주노총과 공동투쟁도 합의했다. 양대 노총의 연대투쟁 결의는 1996년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 당시 여당)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며 총파업을 벌인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당시 양대 노총은 날치기 통과 직후 총파업과 8만명 규모의 공동 집회를 개최하는 등 연대투쟁을 전개했다. 양대노총이 밀어붙이자 결국 정부가 97년 3월 노동법을 재개정하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양대 노총의 강력한 연대투쟁은 “노동자를 벌레 보듯 하는” 친기업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정책도 흔들여 놓을 수 있다. 투쟁을 기피하며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내세워 온 한국노총 지도부가 대정부 투쟁에 나선 것은 적극 지지할 만하다. 한국노총의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현장 대의원들은 “7일 노동자대회까지(정부의) 분명한 답변이 없으면 정책연대 파기와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을 선언해야 한다”, “다시는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야 한다”며 강력한 투쟁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즉각 파기하고 모처럼 찾아온 연대투쟁의 기회를 잡아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와의 물밑협상이나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에 미련을 두고 6자 대표자 회의에만 연연해선 안 될 것이다.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는 협상만으로는 어떠한 요구도 정취할 수 없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 등과 ‘전임자 임금지급 보장’을 맞바꾸는 배신적 합의를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장석춘 위원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강조했듯이 “정부가 굽히지 않는다면”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겠다”는 각오를 투쟁으로 보여 줘야 한다.

김상진 한국노총 세종호텔노조 위원장

위기의 시대, 대안을 찾는 자유로운 토론 공간 —

다함께 지역사회포럼, 대학맑스주의포럼에 초대합니다!

지역사회포럼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오바마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의 미래
연사: **장창준**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장병호 ((레프트21) 기자)
일시: 11월 10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해화역 4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CGV 옆)
참가비: 2천5백 원
연락처: 070-8113-8541 | 010-3362-1968

서울 동부 사회포럼
동유럽 몰락 20년 — 옛 소련 블록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연사: **조성민** (다함께 활동가)
일시: 11월 11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여성능력개발원 3층 제1회의실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참가비: 4천 원
연락처: 02-447-0397 | 010-8439-0502

서울 서부 사회포럼
동유럽 몰락 20년 — 옛 소련 블록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연사: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
일시: 11월 12일(목) 오후 8시
장소: 신촌 토즈 비즈센터 (신촌 지하철역 6번 출구)
참가비: 4천 원
연락처: 02-324-3400 | 010-7214-1157

서울 남부 사회포럼
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
연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장병호 ((레프트21) 기자)
일시: 11월 12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강남스타디 605호 (강남역 6번 출구 외환은행 건물 6층)
참가비: 4천 원
연락처: 02-416-0963 | 010-5784-3175

경기남부 사회포럼
진보진영 전략 논쟁 — 반MB 민주대연합인가, 진보대연합인가
연사: **안동섭**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10.28 재보선 수원 장안 국회의원 후보)
최영준 (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11월 17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민주노총 경기본부 대회의실 (수원역 앞 도청사거리 방향 5분, 매산동주민센터 옆)
참가비: 3천 원 / 연락처: 010-6663-0032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재앙적인 기후변화를 어떻게 멈출 수 있는가?
연사: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장호중 ((레프트21) 기자)
일시: 11월 25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해화역 4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CGV 옆)
참가비: 2천5백 원
연락처: 070-8113-8541 | 010-3362-1968

서울 동부 사회포럼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본 중남미 좌파 정권 평가와 전망 — 한국에 주는 교훈
연사: **박정훈** ((한겨레21) 라틴아메리카 전문위원, <프레시안> 라틴아메리카 전문기자,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이수현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21세기의 혁명> 역자, <체 게바라와 쿠바 혁명> 역자)
일시: 11월 25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여성능력개발원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참가비: 4천 원
연락처: 02-447-0397 | 010-8439-0502

대전·충남 사회포럼
기후변화 —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전환은 가능한가
연사: **김중환** (연세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 연구원)
일시: 11월 25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대전시민아카데미 (시청역 2번 출구)
참가비: 4천 원 / 연락처: 010-4743-6790

대학 맑스주의 포럼

서울
경제 회복인가, 새로운 거품인가 — 마르크스주의로 본 오늘날 경제위기
연사: **이정구**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연구교수)
일시: 11월 11일(수) 오후 7시
장소: 중앙대학교 법학관 904호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1번 마을버스 중앙대 후문 하차)
참가비: 2천5백 원 / 연락처: 010-5678-8630

강원
경기 회복인가 새로운 거품인가 — 마르크스주의로 본 경제위기의 전망과 대안
연사: **강동훈** ((레프트21) 기자)
일시: 11월 11일(수) 오후 7시
장소: 강원대학교 석재 5층 생활도서관
참가비: 없음 / 연락처: 010-9805-1050

인천
동유럽 몰락 20년 — 옛 소련 블록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연사: **전지윤** ((레프트21) 기자)
일시: 11월 13일(금) 오후 7시
장소: 인하대학교 (후후 공지)
참가비: 2천 원 / 연락처: 010-9238-5338

전북
위기의 자본주의 대안 논의 ② — 차베스 집권 10년, 베네수엘라 모델 평가와 전망
연사: **임승수** (<차베스, 미국과 맞장뜨다> 공저자,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저자)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차베스, 베네수엘라, 그리고 21세기 혁명>, <체 게바라와 쿠바혁명> 역자)
일시: 12월 3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전북대학교 사회대 420호
참가비: 3천 원 / 연락처: 011-9065-8806

홍세화 인터뷰

“대학서열화는 지배의 강력한 기제로 작용”



홍세화

며칠 후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여전히 학생들은 살인적 입시 경쟁 속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에게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들어 봤다. 홍세화 기획위원은 ‘학벌없는사회’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의 일제고사, 자사고 확대 등 경쟁강화 교육 정책을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한마디로 광란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증세가 더 심해졌죠. 교육은 그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고 또다시 재생산하는데, 몰상식하고 야만적인 사회가 그대로 교육에 반영돼 있고 그런 교육에 의해서 다시 그와 같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악순환입니다.

결국 지배계층의 교육을 통한 대물림 구조를 강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영어 유치원에서부터, 사립초등학교, 국제 중학교, 특목고와 자사고, 상위권 대학, 그 다음에 미국 유학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한 대물림 지배구조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래전부터 대학평준화를 주장해 오셨습니다. 왜 대학평준화인가요?

유럽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대학평준화 체제가 절대 다수고 보편적입니다. 우리가 교육 문제를 바라볼 때 그만큼 근시안적이고 우물 안 개구리라는 거죠.

우선, 학생들을 경쟁 구조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교육 광풍에서부터 해방해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가 대학 입시에 종속돼 있는 이 구조에 의해서 교사들까지도 참된 교사로서의 자리를 위협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교육의 3주체가 대학이 서열화돼 있는 이 구조에 의해서 모두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학서열체제가] 인문사회과학을 반(反)학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문사회과학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학문이고 정답이 없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생각을 물어서는 그 생각을 토대로 줄을 세울 수가 없으니 생각을 묻지 않고 대신 암기를 요구합니다. 논리와 사고의 학문

이어야 하는 인문사회과학을 암기과목으로 바꿔 버린 것입니다.

예컨대, 사형제도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뭐 이런 건 묻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런 식이죠.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동성애자가 결혼할 수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역사에 대한 안목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암기시키는 식입니다.

이것은 대학이 서열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서열화된 대학에 맞춰서 학생들을 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비판적 안목을 주지 않는 것은 [지배계층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기제 중 하나예요. 대학서열화는 지배의 강력한 기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평준화’ 하면 보수 언론과 보수세력들은

하향평준화를 말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는 상위 5퍼센트 학생들을 제외하면,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보다 [성적 향상을] 높다는 것을 보여 줬어요.

또 이른바 정보화 시대, 지식 기반 사회라고들 하는데, 여기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창조성과 상상력이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 구조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고등학생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작년 촛불시위에도 여고생, 여중생들이 나왔듯이 말입니다.

이것 말고는 제도에 의한 변화로 가능할 텐데, 그러려면 우선 한나라당이 약화돼야 하고 그런 만큼 진보정당이 몇십 명이라도 국회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정리 이현주 기자 | hyunju43@left21.com



지문

지긋지긋한 경쟁만 강요하는 학교로 가는 길이 즐거울까?

외고 폐지 논란

‘깍뎂기’ 만 바뀌 입시 경쟁을 강화하려는 책략

외고 폐지 논란을 촉발한 한나라당 의원 정두언이 10월 30일 ‘외고 폐지’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법안을 찬찬히 살펴보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외고 폐지’ 법안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다.

우선, 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은 충실한 진로교육 및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한다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담고 있다. 1백 퍼센트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지만 진로적성검사를 “외고가 지원 전형 요소로 요구하는 순간, 검사를 위한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검사 결과에 심각한 왜곡이 일어날 소지가” 큰 것이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서천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또 법안대로 외고가 자율학교로 전환하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자율형 사립고 역시 “사립학교의 운영에 자율성·책무성을 부여”받는다. 학교가 얼마든지 학생 선발 자율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는 또 다른 ‘귀족 학교’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외고와 조금

도 다를 바가 없다(레프트21) 17호 기사 ‘외고 폐지만이 아니라 고교평준화 정상화가 필요하다’를 보시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미친 교육 정책을 잘 폭로해 온 진보신당이, 특성화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면서도 정두언 법안을 환영한다고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데, 보수 언론은 사기에 가까운 이 법안마저도 ‘수월성 교육’을 해친다며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이명박도 “수월성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자사고(자립형 사립고)도 없애자고 하는 것 아니냐”하고 ‘외고 폐지’ 논란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었다.

수월성

따라서 정부가 12월 초에 발표한다는 외고 ‘개선’ 방안은 ‘수월성 교육’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외고들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외고 입시제도 몇 군데 고치는 정도가 될 것이 뻔하다.

그러나 입시제도 ‘개혁’으로는 고입 경쟁, 사교육비 유발, 외고를 통한 부와

학력의 대물림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수 없다. 외고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명문대 보내는 입시 학원으로 존속하는 한 외고 입시 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대학 입시제도를 수차례 바꿨지만 대학서열체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대입 경쟁은 조금도 줄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기로 하자마자 10회 상담에 1백만~7백만 원을 받는 상담 학원이 횡행하는 것을 보라.

외고들은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확대하겠다고도 한다.

그러나 평범한 서민들 중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더라도 한 해 6백만~1천만 원에 이르는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전교조의 지적처럼 “외고의 문제는 이미 진통제나 해열제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평준화를 정상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초중고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만들고 학생들을 지옥 같은 입시 경쟁으로 몰아넣는 대학서열을 해체해야 한다.

이현주 기자 | hyunju43@left21.com

수능을 앞두고 읽어볼 만한 책

경쟁은 협력보다 비효율적이고 열등하다

《경쟁에 반대한다》 알피 콘, 산논, 15,000원, 368쪽

입시 경쟁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보면서, 경쟁이 없으면 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다. 또, 시장의 폐해에 반대하면서도, 시장을 민주적 계획으로 완전히 대체하자는 주장에 선뜻 찬성하지 않는 것은 경쟁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경쟁을 불패하게 여기는 사람들조차 과도한 경쟁이 문제지 ‘적당한’ 경쟁은 더 생산적이고 따라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 번역돼 나온 알피 콘의 책 《경쟁에 반대한다》(이전 판은 비봉출판사에서 《경쟁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나왔다는 신선한 충격과 영감을 줄 것이다.

우선, 저자는 경쟁의 본질을 “상호 배타적인 목표달성”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당신이 실패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나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은 경쟁을 미화하는 대표적인 형용모순이다.

무엇인가 잘하는 것과 남을 이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예를 들어, 내가 미적분을 제대로 이해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타인과 경쟁할 필요는 없다. 반면, 경쟁은 인간의 수많은 능력들 중에서 소수의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서만 더 높은 성과를 내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나는 그가 배움 그 자체를 진짜 재미있어 했으며, 그래서 오히려 더 뒤처진다는 것을 알았다. 이를 테면 입체기하학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삼각함수는 나만큼 잘하지 못했다. 우리는 볼테르의 칸디드를 읽어야 했는데, 그는 거기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뿜으며, 다른 급우들이 [점수를 따기 위해] 이미 다른 저자의 책을 읽을 때에도 프랑스 원어로 된 볼테르의 다른 소설들을 섭렵했다. 이것도 그의 약점이 되었다.”

결국 “우리들의 교육제도에서 가장 ‘성공한 학생’이란 이렇듯 자신만의

신념을 포기하고, 승리에만 집착하는 학생이다.” “이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수학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실패를 소망하는 마음인가?” 라는 저자의 질문은 의미심장하다.

인간 본성

둘째, 이 책은 경쟁이 ‘인간 본성’이라는 주장뿐 아니라 경쟁이 더 생산적이고 또한 흥미를 유발한다는 ‘상식’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반박한다.

“수준이 낮거나 중간 정도인 학생이 각각 다른 능력을 가진 학생들과 협동하여 학습하면 더 잘 배우게 되는 것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학생들도 홀로 공부할 때보다는 성적이 좀 떨어지는 아이와 협력하여 공부할 때 더 좋은 성과를 올린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었다.”

끝으로, 경쟁이 협력보다 덜 효율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자존심’에 타격을 입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움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학생들에게 **하찮고 경멸스러운 보상** —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 100점이라는 표시를 한 채 벽에 붙어 있는 시험지, A라고 쓰여 있는 성적표, 우등생 명단,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클럽의 열쇠, 즉 간단히 말하면 다른 학생들보다 내가 좀 낫다는 **저열한 만족감** — 을 장려하고, 강요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그 의지를 꺾어버린다.”(강조는 인용자)

따라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기본인 사회는 경쟁적인 사회보다 결코 비효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사회다.

경쟁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 본 모든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강동훈 기자 | kah@left21.com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④



지난 9월 필리핀에서 발생한 홍수로 최소한 수백 명이 죽거나 실종됐다. 몇 년 뒤엔 한강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기후변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편집자] 12월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COP15)가 개최된다. 1997년에 만들어진 교토협약(온실가스 감축 협약)은 오는 2012년에 효력이 끝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토협약을 계승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협약의 큰 틀이 확정될 예정이다. <레프트21>은 기후변화 협약을 둘러싼 국내외 논쟁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석유·석탄 같은 화석 연료 사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구인 '기후변화 정부간 패널'(IPCC)은 205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80퍼센트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1990년보다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목표치를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회의를 앞두고 각국 정부와 기업 등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 기화연재의 앞 기사들에서 지적했듯이 이들의 분주함은 기후

변화를 멈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 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빈국에 책임 떠넘기기, 기업들에 특혜 주기, 기업이 분식회계 하듯 서류상에서만 온실가스 줄이기, 안전하지 않고 불확실한 기술로 사람들을 현혹하기, 경제 위기 대처 방식처럼 평범한 사람들만 허리 졸라매기, 그냥 못 하겠다고 버티기 등.

이런 방식으로는 기후변화를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 부문만 봐도 예컨대 프랑스 국토 면적만 한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되면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대체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세계지도를 찾아 보면 아프리카 사막과 호주 내륙, 북아메리카와 중앙아시아의 넓은 평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올 것이다. 바다 위에 발전소를 짓는 방법도 개발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꼭 한 곳에서 생산할 필요도 없다. 적재적

소에 분산하면 거의 눈에 띄지도 않는 면적만 차지하고도 훨씬 효율적인 전력 생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은 이미 나와 있다. 게다가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조력 등 가능한 대안의 가지수도 많다.

대중교통과 철도 수송 체계를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면 두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자동차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건물들에 제대로 된 단열 조치를 하는 것으로도 냉난방에 사용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에 참전한 1942년,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상원에 전비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 규모가 1941년 미국 GNP와 맞먹었다.

당시 창설된 전시생산위원회는 모든 산업과 생산을 통제했다. 수많은 자동차, 선박 공장이 탱크와 비행기,

군함을 만드는 공장으로 전환됐다.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었지만 정치적 집중과 선택은 여러 부문에 걸쳐 상승 효과를 냈고 효율을 높였다. 1941년에 '자유호(Liberty ship)'라는 군함 한 척을 만드는 데 평균 2백45일이 걸렸지만 1943년에는 39일로 단축됐다. 유명한 카이저 알루미늄은 19일로 단축했다.

당시와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저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그런 조치들을 시행했고 우리는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해 그런 조치를 도입하라고 요구한다는 것뿐이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과학자 수천 명의 예측이 빗나가길 바라며 정부와 기업주들이 알아서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정부가 행동에 나서도록 할 강력한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몇 년, 혹은 십수 년의 시간이 남았다. 이 시간 동안 정반대쪽에서 정부를 붙들고 있는 자본가들의 저항까지 분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져야 한다.

장호중 기자 | rednuc@left21.com

쌀값 보장과 대북 쌀 지원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투쟁은 정의롭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농사가 풍년이다. 그러나 풍년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촌에는 오히려 농민들의 한숨만 커지고 있다. 풍년으로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중단하면서, 쌀 재고가 늘어나 문제를 더 키웠다.

농민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가을에 쌀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쌀값 대란은 없을 거라며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했다. 농가부채를 탕감하고 소득을 보장하기는커녕, '농가 재무구조 건전화'를 명분으로 농토 매각을 부추기고 보조금을 선별 지급함으로써 기업농에 유리한 계획(농업선진화 계획)만 내놔다. 그리고 농민들의 투쟁이 확대되자, 국정원과 농식품부는 "전농을 고립시켜 입지 약화를 도모"한다는 '전농 죽이기' 계획을 세웠다.

결국 쌀값 대란은 현실이 됐다. 생산지 쌀값은 10년 전 12만 원(80kg 기준, 이하 동일 기준)과 다를 바 없는 14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 그런데 비료값, 기름값 등 생산비는 10년 전보다 3배 이상 폭등했다. 농사를 지을수록 빚더미만 쌓이게 되는 구조다.

그래서 쌀값 폭락에 직면한 농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논을 갈아엎거나, 나락을 불태우고 지자체 청사에 쌀을 쌓아 두는 등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농민들은 쌀 대북 지원 재개와 법제화, 쌀 목표가격 21만 원 보장, 저소득층 쌀 현물지원 확대, 해외 원조 확대 등을 요구한다.

폭락

농민들의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다. 쌀값 폭락은 농업을 자본주의적 시장 논리에 종속시킨 결과다. 역대 정부들은 도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려고 곡물가를 낮은 수준에서 인위적으로 통제했다. 그나마 농민들의 요구로 추곡수매가는 조금씩 인상됐지만, 농민들의 삶을 근본에서 개선할 수준은 못 됐다.

그러다 1993년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계기로, 정부가 농업을 시장에 맡기면서 농민들의 처지는 급속히 악화했다. 1995년에서 2001년까지 농가소득은 9.7퍼센트 늘었지만, 농가부채는 무려 1백22.4퍼센트나 늘어났다. 급기야 2005년 노무현 정부는 WTO 농업 보조금 축소 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추곡수매제를 폐지했고,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목표가격조차 시장가격의 변동에 연동시켰다.

그 결과 목표가격은 계속 낮아지게 됐고, 현재의 목표가격 17만 원으로는 생산비도 충당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농민들은 목표가격을 21만 원으로 올리고, 시중 쌀 가격과의 차이는 정부가 지원하라고 요구한다.

이런 요구는 노동자들이 소비하는 쌀값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자와 농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재원은 부자 감세액 80조 원의 일부만 투입해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대북 쌀 지원 재개 요구와 저소득층 쌀 지원, 쌀 해외 원조 확대 요구도 정당하다.

남한에서 쌀이 남아도는 동안, 북한은 1백8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해 8백70만 명이 기아에 직면해 있다(세계식량계획).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쌀은 군량미로 쓰일 수 있다며 대북 쌀 지원 요구를 냉혹히 거절하고, 고작 옥수수 1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남한의 결식아동도 7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명박은 내년도 결식아동 예산 4백21억 원을 삭감하려 한다. 반면 농민들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신청자에게만 쌀 가격 절반을 지원해 주던 것을 대상자 전원에게 무료 공급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한다.

농민들의 요구는 농업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농민들의 투쟁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도전하고 민중의 연대를 구현하려는 정의로운 투쟁이다.

정병호 기자 | multitask@left21.com

‘윈디시티’ 김반장은 무죄,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10월 2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소울그룹 '윈디시티'의 멤버 김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한 카페에서 대마초 약 0.2g을 흡연한 혐의다.

윈디시티는 그동안 반전 운동, 용산참사 항의 운동 등 다양한 사회 운동에 참가해 진보적 목소리를 내 왔다. 이번 처벌은 이에 대한 보복 성격도 있어 보인다.

이미 지난 2004년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대마초 마약 규정이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지지선언을 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마는 소량으로도 환각 상태를 일으킬 수 있어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1960년대 주한미군을 통해 대마초가 남한에 널리 퍼진 이후, 대마



이주노동자 집회에서 연주하는 김반장

초를 강력히 규제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9호를 통해서였다. 민주주의를 완전히 묵살했던 유신체제가 현재 대마초 규

제의 시작인 것이다.

대마초가 인체에 치명적이라거나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다.

위험성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술과 담배가 훨씬 위험하다. 1995년 세계보건기구 '알콜, 대마초, 니코틴과 진정제 사용에 따른 보건과 심리적 평가 보고서'는 '대마초는 술과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1998년 유엔마약위원회 통계를 보면 담배 사망자는 43만 명, 술로 인한 사망자는 11만 명으로 집계된 데 반해 대마초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

중독성도 과장돼 있다. 1999년 미국 의약연구소(AMI) 보고서는 담배와 술이 각각 중독 비율이 32퍼센트, 15퍼센트인 데 비해 대마초(헤시시포함)는 9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냈다.

대마초가 범죄와 연관돼 있다는

것도 허구다. 1989년 영국의료협회의 보고서를 보면, 살인 사건의 60~70퍼센트, 상해 사건의 75퍼센트, 가정 폭력의 50퍼센트가 오히려 음주와 관련 있었다.

사람들은 자기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본주의에서 가난과 소외가 만들어 내는 고통을 달래려고 술, 담배, 대마초에 의존하곤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이들이 아니다. 거대 술, 담배회사 들(한국의 경우 국가 자신)은 사람들의 소외를 이용해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그 폐해에 대해서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한다.

누구라도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 당해서는 안 된다. 범죄화는 대마초나 마약에 대한 공개적 토론과 객관적 연구를 방해할 뿐이다. 우리는 대마초 합법화를 옹호해야 한다.

김석진

우원석 영화칼럼

젊은 영화



지난 칼럼에서 <디스트릭트 9>을 기대작으로 추천한 뒤 불안했다. 해외 영화평들이 좋아도 보지도 않은 영화를 권하는 건 도박이다. 그래서 혹시나 하며 영화를 보았는데 다행히 역시나였다. 영화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정치적으로도 의미 있고 장르적으로도 재미있다.

외계인 이주민들이 격리수용되고 차별 당한다는 가상 설정을 통해 인종 문제를 풍자한 SF 영화 <디스트릭트 9>은 패기 넘치고 대담하다. 29살 먹은 젊은 감독 닐 블룸캠프는 신선한 발상, 진솔한 사회 비판, 속도 빠른 이야기 전개와 거친 촬영 등으로 새로운 감흥을 만들어낸다. 영화적 허점들이 가끔 눈에 띄지만 감독은 시치미를 뚝 떼고 정면 돌파한다. 가령, 외계인의 기술을 탐내는 외계인 관리 회사가 기술의 보고인 거대 우주선을 20년 넘게 허술하게 방치했다는 점도 말이 안 되고, 내레이션 구실을 하는 먹큐멘터리(Mockumentary : 가짜 다큐멘터리) 인터뷰 장면들도 때로 감독의 편의대로 삽입되어 형식적 완성도를 해친다. 하지만 이런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도대체 뭐가 그리 대수란 말인가. 젊음과 패기로 무장한 영화는 구차하게 허점들을 감추려 하지 않는다. 오직 이야기의 큰 흐름과 핵심 정서를 똑심 있게 강조해 스크린 속 리얼리티를 기여코 긍정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젊은 영화에 아쉽게도 노인네 같은 대목이 있다. 예컨대, 주인공 비커스는 소심하고 허약한 남자인데, 영화 끝 무렵엔 외계인의 무기를 이용해 악당들과 싸우는 강한 남자로 변신한다. 이런 변신, 즉 소심, 허약, 결여 사유가 있는 남성이 수퍼파워를 획득해 강한 남자로 거듭나는 것은 수많은 영화들에서 지겹도록 되풀이되는 낡은 모티브다.

환골탈태

이런 모티브를 가장 노골적으로 사용한 영화는 제 목조차 직설적인 <슈퍼맨>(1978)이다(<슈퍼맨>을 부정적으로 언급하자니 마음이 불편하다. 이 영화를 만든 리처드 도너 감독을 정말 존경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리 유치한 스토리라도 영화적으로 멋지게 가공해낼 줄 아는 할리우드의 진정한 장인이다). 슈퍼맨은 하늘을 나는 초인이지만 평소에는 소심, 허약한(척하는) 이중적 존재다. 그리고 이 이중성이 교차하는, 즉 허약한 남자에서 강한 남자로 변신하는 순간이야말로 이 영화의 또 다른 클라이맥스다. 슈퍼맨이 공중전하 부스에서 고리타분한 양복 — 허약한 남자의 허물 — 을 벗고, 근육질의 쫄터 몸매를 드러내는 환골탈태 장면들을 보라. 거가야말로 관객들의 환호가 가장 크게 쏟아지는 대목들이다.

이런 변신 모티브는 사실 유아적이다. 소싯적 동네 강파에게 ‘뽕’ 뜯길 때 흔히 떠올리는 유치한 상상, 즉 힘센 이로 변신해 강파를 혼내주는 어리숙한 공상 같은 수준의 상상력이다. 게다가 편향적인 남성성에 기초를 둔 발상이다. 남자란 자고로 주먹 좀 쏠 줄 알아야 멋지다는, 쉬운 선입견에 기댄 생각이다. <디스트릭트 9>은 이런 유아적, 편향적 판타지를 넘지 못한다. 장르 영화나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영화의 열기왕성함이 인상적이었던 터라 낡아 빠진 남성 변신 모티브를 되풀이하는 대목이 더 진하게 아쉽다.

진정 모든 면에서 패기 넘치는 젊은 영화를 보고 싶은 독자들에게 톰마스 빈터베르그 감독의 <셀레브레이션>(1998)을 권한다. 주인공 크리스찬은 아버지의 생일 파티에 참가한다. 부와 권력을 가진 부르주아지 아버지의 생일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분위기가 성대하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준비된 반란을 실행한다. 어릴 적 크리스찬과 그의 누이를 학대, 강간한 폭군 아버지와, 교양 넘치는 귀부인 행세를 하는 위선적인 어머니의 과거 등을 폭로하며 파티를 단숨에 아수라장으로 만든다. 일단 싸움이 시작된 이상 어떤 망설임도 치명적이다. 그는 늙은 여우 같은 부모와 비타협적인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다.

<셀레브레이션>은 형식적으로도 대담하고 호기롭다. 쓸데없이 비싸고 비대한 현대 영화 테크놀로지와 속된 강정 같은 고전 영상미학 등을 깡그리 부정하고 공격하기로 작심한 감독은 일체의 조명 장비 없이 조악한 비디오카메라로 단 일주일 만에 촬영을 마쳤다. 결과는 환상적이다. 직접 확인해 보시길.

우원석 영화감독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근절 캠페인

낙태 비난에 맞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해야 한다

11월 1일, 산부인과 의사 30여 명은 대한산부인과협회의 반발에도 결국 ‘낙태 근절 캠페인’ 선포식을 강행했다. 이들은 “임산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임신중절 이외의 모든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을 것”이고, 연말부터 불법 낙태 시술 병원 명단을 공개해 수사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엄포했다.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도 이 캠페인을 환영하며 “이들의 결단이 실현돼 우리 사회가 생명경시 풍조를 극복”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도 이미 낙태의 90퍼센트 이상이 불법인 상황에서 지난 6월 말에 낙태 허용 사유와 기간을 더 제한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극히 제한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모두 불법이었지만, 실제로는 낙태가 ‘암묵적’으로 용인’돼 왔다. 그러나 이번 낙태 근절 캠페인을 계기로 “불법 낙태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MBC 뉴스).

비록 아직은 이 캠페인에 소수의 의사만 참가하고 있지만, 이 캠페인을 분명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회 전반에서 낙태하는 여성들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강화될 것이다. 보수 언론들은 이미 낙태 근절 캠페인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범 케이스로 몇몇 처벌 사례가 생겨날 수도 있고, 사회적 냉대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에 있는 10대 청소년들과 비혼모들이 가장 먼저 속죄양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생명 존중’이라는 명분으로 낙태 처벌 강화를 요구하지만, 낙태 문제의 핵심은 여성의 몸과 삶은 여성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삶 전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원치 않은 임신을 중단하고자 하는 여성의 의사는 언제나 존중돼야 한다.

저출산이 ‘낙태 근절 캠페인’의 정당한 명분이 될 수도 없다. 저출산 문제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5퍼센트도 되지 않고,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2006년에 이미 70퍼센트를 육박했는데도 여전히 M자형 곡선(출산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다가 출산 후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나라에서 여성들에게 낙태하지 말라고 억박지르는 것은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법에 여성의 삶을 끼워 맞추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형편없는 양육 지원, 비혼모를 사회적



여성의 몸과 삶은 여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여성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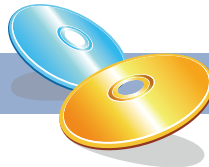
으로 낙인찍고 차별하기, 보수적 성교육 때문에 피임률이 낮은 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실질적 일 것이다.

낙태 근절 캠페인은 양육 지원 같은 국가의 책임은 뒷전으로 미루고

여성들을 속죄양 삼는 데 치중할 뿐이므로 반여성적인 시도다. 따라서 진보·여성 운동은 이 캠페인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옹호해야 한다.

최미진 기자 | lionlady@left21.com

DVD



1989년 베를린 장벽과 동유럽 붕괴를 다룬 영화 3편

〈타인의 삶〉

1980년대 중반 한 동독 비밀경찰의 활동을 다룬 스릴러다. 한 동독비밀 경찰이 반체제 동조자로 의심받는 극작가를 감시하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이 극작가가 표적이 된 진정한 이유는 한 정부 장관이 극작가의 애인에 흑심을 품었기 때문이란 점이 드러난다. 〈타인의 삶〉은 배우의 탁월한 연기가 돋보이는 감동적 드라마다. 또, 동독 국가를 지탱한 기구의 편집증적 작태와 잔혹함을 엿볼 수 있다.

〈굿바이 레닌〉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를 둘러싼 사건들을 풍자한 재밌는 희극이다. 동독 국가의 스탈린주의 이데올로기에 충성을 바치는 리스티안느는 텔레비전에서 시위 장면을 보던 중 심장마비로 쓰러진다. 그녀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8개월 뒤 일어난다.

장벽이 쓰러지고 서독의 상업 문화의 상징물들이 동독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새로운 정치 상황에 충격받



아 어머니가 죽을까 봐 걱정된 아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이 가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진실을 숨기기 위해 극단적 수단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온갖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데 ….

〈그때, 거기 있었습니까?〉

1989년 루마니아 혁명 16주년 기념식이 배경이다. [영화의 원제인] 〈부쿠레슈티, 12월 22일 12시 8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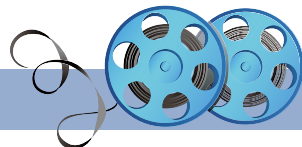
은 차우세스쿠가 대중 항쟁에 쫓겨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도망친 순간을 말한다. 루마니아 지역 도시에 사는 자화자찬하기 좋아하는 기업가가 허접한 TV 토크쇼에 참가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묘사한 이 영화는 슬프면서도 건조한 유머를 보여 준다.

토크쇼의 화제 중 하나는 ‘그날 마을 광장에서 진정한 혁명적 시위가 발생했는가?’ 이다. 논점은 이 거주자들이 차우세스쿠의 몰락 이전, 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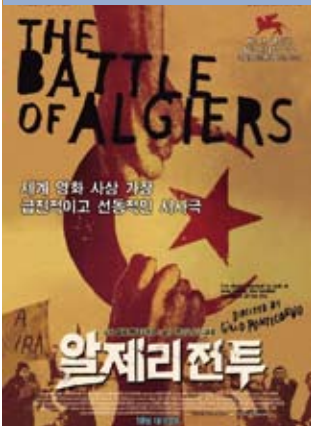


은 이후에 시위를 벌였는가. 그들은 혁명을 주도한 용맹한 선지자였던가, 아니면 단지 시류에 편승한 겁쟁이들이었던가?

토크쇼 초대 손님으로는 12시 8분 전에 자신이 반란을 주도했다는 알콜중독 교사와 그랬는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75세의 유쾌한 노인이 출연한다. 그런데 전화를 건 시청자들은 논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영화명 〈알제리 전투〉 감독: 질 폰테코르보 음악: 엔니오 모리코네



반제국주의 투쟁을 이해하려면 꼭 봐야 할 영화

이른바 ‘정치 영화’는 지루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라도 이 영화를 반드시 봐야 한다. 〈알제리 전투〉는 프랑스 식민 점령에 맞선 알제리 민족해방 투쟁이 승리한 후, 이 투쟁에 실제로 참가했던 사람들이 배우로 출연해 만든 영화다.

이탈리아의 좌파 감독 질 폰테코

르보는 주인공의 행위를 미화하는 할리우드 영화들의 나태한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 투사들은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제국주의 점령군에 맞서 싸웠고 그 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알제리 전투〉는 그것을 다큐멘터리처럼 생생하게 보여 주면서도 투쟁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어

려운 과제를 성취했다.

그 결과 이 영화는 반제국주의 투쟁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가 됐다. 2004년 미국 백악관 보좌관들이 이라크에서 반점령 세력의 저항에 부딪치기 시작하자 이 영화를 집단으로 관람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김용욱 기자 | ohotongje@left21.com

이강택 칼럼

헌재, 최후의 심판자?

이강택 KBS PD /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누가 유가를 움직이는가 — 오일쇼크의 배후’ 등 연출

삼류 권투중계의 추억

TV 생중계를 보다가 문득 떠오른 건 어린 시절 본 권투 중계방송이었다. 수십 년 전 장충체육관 특별 링에서 벌어지던 그 경기들을 보며 얼마나 가슴을 죄었던가. 하지만 판정결과가 발표될 즈음 거의 긴장할 필요가 없었다. 한국 선수가 다운만 안 당했으면 승패는 보나마나였고, 설사 다운을 당하고 일방적으로 몰렸더라도 현역 챔피언이면 십중팔구 손이 올라갔기 때문이었다. 심판 3명 중 한 명이 먼저 상대 선수를 호명해 긴박감을 자아내고는(0:1), 곧이어 다른 한 명이 상당한 점수 차로 한국선수의 우위로 판정하고(1:1), 마침내는 마지막 한 명이 근소한 차이로 한국선수에 우세(2:1)를 주거나 무승부를 선언하는 패턴. 그 시절의 판정은 으레 그랬고, 본인도 멋쩍어하면서 시퍼렇게 멍이 들고 코피가 터진 한국 선수의 손이 올라가곤 했다.

이따금 상대 선수(주로 동남아 출신이었는데)가 판정에 항의라도 하거나 관중들이 야유를 보낼라치면,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나서서 “그래도 일단 판정이 났으면 승복하는 게 선수의 도리이자 페어플레이 정신”이고 “흠 어드벤처지는 어디에도 있는 것”이라며 서둘러 중계방송을 끝냈다. 억울하면 지네 나라에서 하거나 KO로 이겨야 하는 법이라는 교훈(!)을 남겨 준 그 시절의 심판들은 다음 경기에서도 계속 심판을 보았다.

‘흑시나’와 ‘역시나’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0:1), 중대하거나 결정적이지 않고(1:1) 삼권분립 원칙이 있으니 국회가 알아서 하면 된다(2:1)는 왕년의 권투심판급 지혜(?)를 두고 무성한 말과 패러디가 오간다. 하여 거기에 몇 마디 덧붙여 봤자 무용할 것이기에, 나는 오히려 되묻고 싶다.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헌재의 본색이 아니었던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헌재의 판결에 모든 것을 맡기는 듯한 모양새가 내심 찜찜하고 불안하면서도, 워낙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기에 흑시나 했던 것 아닌가?

관습법이라는 해괴한 논리까지 동원해 수도 이전을 저지하고, 종부세를 무력화하며, 모호한 ‘국가적 현실’을 고려해 끝내 국가보안법을 살려냈던 보수의 성채로부터, 군사독재 시절부터 판검사 경력을 닦아 왔으며 그 중 극히 일부만이 자유주의 정권의 지명을 받았던 그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한 것 아닐까? 돌아보면 ‘정치적’ 결정을 미리 내려 놓고 그것을 정당화할 논거를 여기저기에서 짜맞추는 것을 되풀이하는 게 그들의 판결방식이었다. 대중의 직접 행동이 분출할 기미가 보이면 그 요구들 중 일부를 수용하는 전향적(물론 자유주의적 틀 내에서이지만) 판결을 내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유지시키며, 대중의 직접행동이 퇴조 기미를 보이면 즉각 기득권 세력의 등기소로 간판을 바꿔다는 것이 그들의 행태였다. 모든 것을 전횡하

는 청와대와 행정관료들, 검찰과 경찰과 국정원과 군대로 이루어진 억압장치들, 교회와 학교와 언론 등 이데올로기 장치들, 재벌이라는 이름의 거대 경제권력들로 이루어진 기득권의 성채 꼭대기에 내걸린 깃발이 절차적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요, 그 상징적 장치로 작동해 온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였다. 그것이 이른바 ‘87년 체제’였음을 우리는 이미 뚝으로 알고 있지 않은가?

다시 첫차를 기다리며

엄밀히 말해 투쟁의 객관적 조건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미디어 악법에 대한, 조중동 방송에 대한, 수구세력의 방송장악에 대한 반대여론은 여전히 60퍼센트를 넘는다. 대중은 결코 ‘헌재 스럽지’ 않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벌써 지쳐 있고, 기회주의적 야당이 한사코 의회주의의 틀을 넘어서지 않으려 한다는 점일 뿐이다. (헌재는 바로 이 악점을 보고 기득권세력의 손을 들어주었으리라.)

따라서 새 방송사업자 선정이 진행되고, 예고된 악몽들이 차례차례 현실이 되기 시작한 지금 전선이 급급히 복구돼야 한다. 진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한 저질 사기극을 끝장내는 싸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를 전면화하는 정의의 싸움이 다시 시작돼야 한다.

최후의 심판자는 저들 노획한 사법기술자들이 아니라 대중이요, 민중이 아니겠는가!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⑦

국가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마이크 헤인즈

세계 자본주의가 휘청거리자 각국 정부는 국가 개입으로 체제를 구출하는 데 혈안이다. 지난 20년 동안 시장이 최선이라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이제 국가가 돌아온 것이다.

이런 상황 변화는 무슨 대단한 이론 때문이 아니라, 실용적 이유 때문이다. 오늘날의 위기는 국가가 자본주의의 작동에 필요한 규칙들을 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경제 주체로 직접 나서야 함을 보여 준다. 이런 상황 변화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딜레마에 부딪힌다. 만약 기업 파산과 국가 지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분명히 사회주의자들은 국가 지원과 국유화를 선택할 것이다. 정신 나간 체제 탓에 기업이 파산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도록 놔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사회주의의 동력이라는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언제나 자본주의의 능동적 요소였다. 19세기 말에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사회주의자들이 국가의 이런 구실을 사회주의적 대안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국가 통제와 국가 생산이 사회주의라면, 엥겔스가 말했듯이 나폴레옹, 메테르니히, 비스마르크도 사회주의 운동에 포함시켜야 한다.

거기에도 오늘날에는 조지 부시를 포함해 더 황당한 자들도 추가해야 할 것이다. 2008년 가을에 미국 정부는 은행들을 서둘러 지원했다. 당시 미국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는 부시, 헨리 폴슨[미 재무부 장관], 벤 버냉키[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가 “미국을 미국사회주의연방공화국으로 바꿔 놓은 볼셰비키 삼인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 금융과 국유화를 추진한 정부는 미국 역사상 자유시장 방임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장 맹신하는 정부였다.”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경고했음에도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자본주의와 사적 소유를 동일시하고 사회주의와 국가 소유·통제를 동일시했다. 이런 논리에 따라 그들은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 같은 사회를 사회주의로 여겼다. 당시 러시아에서는 사적 소유가 거의 허용되지

않았지만,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러시아는 거대한 수용소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 전통”의 [전체가 아니라] 한 조류였을 뿐이다. 다른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권력으로 보았다. 이 전통에서는 민간 자본과 국가자본주의가 모두 적이다. 이 전통의 사회주의자들은, 국가가 자본주의 체제의 악영향을 통제해 체제를 구출하고 체제를 더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방식을 두고 국가자본주의라고 불렀다.

따라서 이 전통의 사회주의자들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은 아이러니해 보일 수 있다. 사실, 1917년 러시아 노동자들은 민간 자본뿐 아니라 국가 자본에 맞서 싸웠고, 레닌은 유명한 팸플릿 《국가와 혁명》에서 사회주의자의 통제 아래 국가 권력이 강화되는 것이 곧 사회주의라는 견해를 비판했다. 오히려 레닌은 사회주의에서는 기층이 주도하는 민주주의를 통해 국가가 결국 사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920년대에 러시아 혁명이 퇴보하고 노동자들이 권력을 잃어버리자 사회주의와 ‘국가자본주의’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다. 러시아의 새로운 특권층은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국가를 장악했지만, 다른 국가들과 경쟁을 벌이는데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다.

그래서 엄청난 논리적 모순이 나타났다. 만약 사회주의가 국가 통제와 국가 소유라면, 사회주의는 세계 자본주의의 많은 지역에서 이미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흔히들 러시아를 그렇게 봤다. 또, 어떤 이는 중국과 쿠바를 사회주의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본다. 제3세계 독재 국가들을 사회주의로 본 사람들도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본주의 핵심부에서도 국가의 구실이 증대했다. 군산 복합체는 국가가 준통제하고 ‘계획’하거나 때로는 완전히 통제하고 ‘계획’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이 전시에는 대다수 자본주의 국가들이 민간 부문을 축소시키거나 긴밀하게 통제했다.

흔히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민영화 때문에 “국가”가 후퇴하고 “국가자본주의”가 약화했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해괴한 방식의 ‘국가 후퇴’였다. 일부 이론가들은 “능력 개발

국가(enabling state)”를 주장했다. 이제 국가는 민간 부문이 더 잘 작동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상층 집단이 ‘민간기업’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가를 강탈할 수 있는 능력만 커졌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부메랑 돼 돌아왔다. 국가가 민간 부문을 구출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국가자본주의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체제 구출”을 위해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이것이 사회주의라는 말에는 코웃음을 친다. 사회주의는 대다수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체제다.

다시 루비니의 말을 들어보자. “사회주의는 정말이지 미국에서 잘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자와 뺨있는 자와 월스트리트를 위한 사회주의다. 이 사회주의는 이윤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 그래서 미국 납세자들은 3천억 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러시아 사회주의자 니콜라이 부하린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설명했다. 자본가 계급은 양쪽에 호주머니가 달린 코트를 입고 있는데, 한쪽 호주머니는 민간기업이라 부르고 다른 쪽 호주머니는 국가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필요에 따라 둘 사이를 이동한다. 오늘날 자본가들이 어디까지 이동할지는 불확실하다. ‘국가 대 민간’을 둘러싼 논쟁에서 진정한 핵심은 효율성이 아니다. 효율성의 모범이라는 은행들이 과연 효율적인가. 오히려 진정한 쟁점은 지배계급 정책과 그들간 갈등이다. 기업주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체제를 구출하려면 그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자신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를 것인가다. 은행들에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윌유스[호주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나 자동차 산업까지 손 봐야 할까?

사회주의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목적은 다르다. 부하린이라면 정말 중요한 것은 코트의 어떤 호주머니를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자본가들의 코트 자체를 벗기는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마이크 헤인즈는 영국 올버햄튼대학교에서 러시아 역사를 가르친다.



논설

경제 위기 효과와 전쟁에 맞선 운동의 결합을 위해

선거가 사회를 근본에서 바꾸지는 못하지만, 열도당토 않은 착각을 교정하는 효과는 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정권 지지율이 50퍼센트까지 올라간 것을 보고, ‘친서민’ 제스처가 대중을 눈속임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희희낙했다. 개혁주의 언론과 지식인들 일각에서도 이명박을 예전처럼 투쟁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성찰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그러나 본지에서 거듭 지적했듯이 이명박 지지를 상충은 거품과 착시에 불과했다. 이명박의 본질이 바뀐 것도 아니요, 대중이 이명박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도 아니었다. 재보선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선거는 또 다른 착각을 낳았다. 대중이 자신들을 신뢰한 덕분에 선거에서 이겼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착각 말이다. 이런 착각 때문에 선거 직후 정세균은 곧장 한나라당 따라하기에 불과한 ‘뉴 민주당 플랜’을 다시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자들과 동맹해야 한다고 여긴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개혁주의 지식인들은 힘이 빠진 듯하다. 여기저기서 민주당에 대한 원망도 들린다. 민주당을 견인하지 못했으며 진보진영의 역량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연합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에 매달린 게 문제였다. 정권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동시에 기업주와도 대결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기업주들의 이익을 거스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진보진영의 처지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단견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은 자신보다 더 취약한 야당(민주당) 덕분에 버틸 수 있었지만, 그나마 이제는 지지율 10퍼센트대 정당에게도 패배했다. 뒤늦게서야 위기를 감지한 우파들은 갑자기 세중시 문제 등으로 자충지란에 빠졌다.

반면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면서 대중은 더 자신감을 얻었다. 그래서 미디어뿐 현재 판결을 두고 “이명박이 당선했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등 ‘현재 놀이’로 저들의 권위를 조롱하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은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거리로 나서며 정권에 대한 전면적 저항을 선언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엿보인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조 통합에 이어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지배자들은 국가기구의 토대가 흔들리는 듯한 불안감에 길길이 날뛰고 있다. 금속노조에서 현대차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기아차 노조에서도 전투적 좌파 후보가 당선했다.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앞으로도 언제 회복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급해진 정부와 기업주들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서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부자 감세, 복지 삭감, 공공부문 구조조정, 임금삭감, 대량 해고 등 다방면으로 공격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동시다발적 공격을 취하는 것은 자충수일 뿐이다. 이미 정부는 상반기 쌍용차 단일 작업장에서 대량 해고를 시도하려다 커다란 저항에 부딪힌 바 있다. 그리고 벌써부터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계획에 맞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려 한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분열을 조장하고 각개격파를 시도할 수 있다. 비정규직을 먼저 공격한다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속죄양을 삼든가, 특정 노조를 집중적으로 탄압한다면,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을 이용한다면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저들이 각개격파하려 할 때, 우리는 일치단결해 대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파들이 언제나 세력 관계를 잘 읽는 것은 아니다.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무리수를 자주 둔다. 벌써부터 이명박은 철두철미 친미적 본색에 충실한 나머지 오바마의 파병 요구에 곧장 화답함으로써 어리석게도 전선을 하나 더 늘렸다.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이 친미인지 자주인지 헷갈리게 했던 노무현조차 파병 결정으로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다. 남한 민중의 강력한 반전 정서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선명 친미 우파인 이명박은 과연 대중의 불만과 저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게다가 아프가니스탄 전황도 이전보다 더 심각하다.

진보진영이 파병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건설한다면, 이명박의 정치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반MB 공투분과 반전평화연대(준)을 중심으로 파병 반대 운동을 신속히 건설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저들의 각개격파에 맞서, 진보진영이 용산참사 항의 운동과 미디어법 투쟁, 교통전가에 맞선 노동자 투쟁,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운동을 결합할 수 있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